

배 포 용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안)

-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 -

2011. 1.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목 차

제1편 총 론	1
제1장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배경	3
제2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및 전망	6
제3장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추진 현황	11
제4장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06~'10) 평가	21
제2편 “新” 친환경농업 비전과 추진 전략	27
제1장 “新” 친환경농업 비전 및 정책 목표	29
제2장 “新”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33
제3장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추진 체계	36
제3편 “新” 친환경농업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39
제1장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41
제2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60
제3장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4
제4장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83
제5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91
제6장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98
제7장 친환경축산·임업·수산업 육성	108

제4편 투자 소요 및 추진 평가 계획119

제1장 투융자 계획 121

제2장 분야별 투융자 계획 122

제3장 계획 추진 및 평가체계 124

제 1 편

총 론

제1장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배경

제2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및 전망

제3장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추진 현황

제4장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06~'10) 평가

제1장.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배경

1. 추진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제6조)**에 의거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11~'15)」 수립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 중장기 농업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등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및 조달 관련 사항
-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추진 배경

-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제기
 - 지금까지의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 필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농식품의 핵심 전략 분야로 '친환경농식품 및 연관산업'이 대두
 - '친환경농식품' 분야가 녹색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증대
 - 녹색인증 10대 분야(저탄소 녹색성장법 근거)에 선정
- 친환경, 웰빙, 식품안전 등 안전·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성·기능성 식품, 로컬푸드 등 고가치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그간의 친환경농업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농어촌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10년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유기농산물 위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천기반 조성 대책 마련
 - * 인증단계별 비중('09) : 저농약 58.1%, 무농약 37.3%, 유기 4.6%
 - 생산과 연계된 가공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분야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

3. 농식품 증장기계획과의 관계

□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09~‘13)”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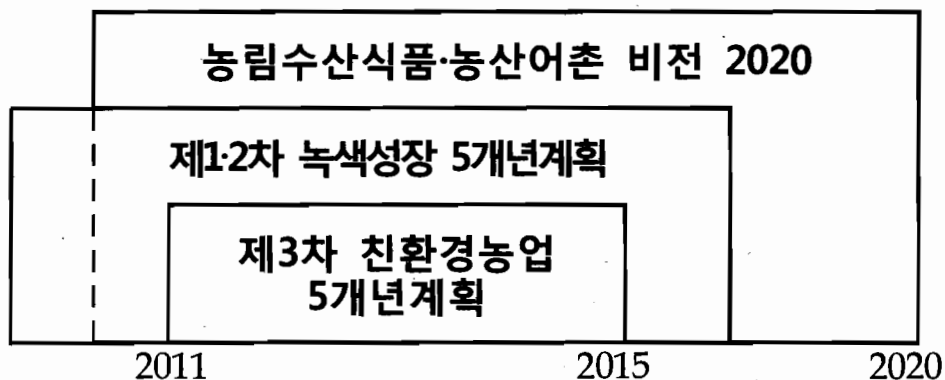
○ 비전 2020 :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장기 비전 제시

○ 녹색성장 5개년계획 :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진 중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추진(‘09~‘13)

<표> 비전 2020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의 연계

비전 2020	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성장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 - 동식물 자원 활용 - 농자재 해외 신수요 창출 농어업의 체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통합·확충 식품산업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 - 전략품목 개발 신시장 창출 국가식품 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지역역량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화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자원화 - 녹색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 녹색생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단지 확대 및 토양지력 증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확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경로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 -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 - 녹색 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제2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및 전망

1.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가 대외적 여건

□ DDA·FTA로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범세계적 시장 통합 가속화

○ 동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고 지역블록화 현상도 심화

* WTO 출범 후 지역무역협정(RTA) 증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 차지('07)

○ 우리나라는 '20년까지 중국·일본 등 64개국과 FTA 체결 추진

* '10년 현재 FTA 진행상황 : 발효(17개국), 타결(29), 협상 중(5), 준비 중(10)

□ 세계 인구 증가, 신흥경제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농식품 수요 확대

○ 2030년까지 세계 식량 수요는 50% 이상 증가(OECD-FAO,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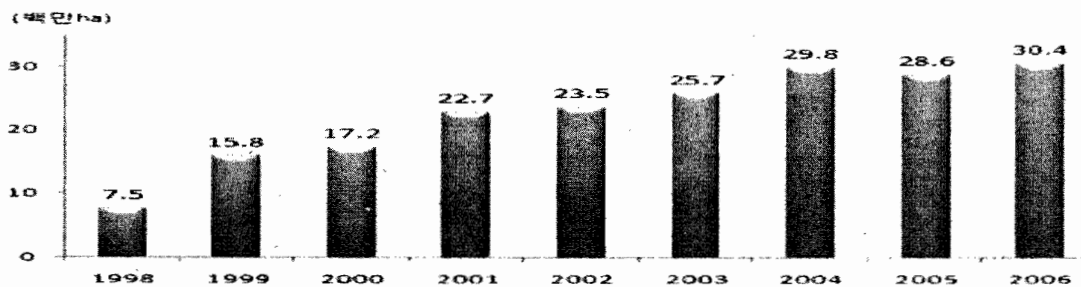
* 중국 인구 1인당 육류소비량 : ('85) 20kg → ('00) 50

- 국제 곡물 가격은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 (OECD 전망)

○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안전 및 기능성 건강식품 수요 증대

- 특히, '98~'06년간 세계 친환경 농업 면적은 305% 증가

< 세계의 친환경 농업 면적 >



자료: <http://www.organic-world.net>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원·환경 제약 심화

○ 산업화·도시화·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기후변화 가속화

* 과거 100년간 세계온도 0.74℃ 상승(한반도 1.5℃ 상승)

- 농어업생산 체계 변화로 식량수급 문제가 심화될 전망

○ 도시화·인구증가 등으로 물을 포함한 농어업자원·에너지 고갈

- 수자원 70%를 사용하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식량생산 차질 우려

* 세계 물부족인구(OECD, 2008) : ('05) 29억명 → ('30) 39억명

□ IT·BT·NT 등 산업·기술간 융복합화 가속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 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산업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상

○ 유비쿼터스, 초고속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유통 혁신 모델 및 디지털 토양 정보·GPS 등을 활용한 정밀 영농 기술 구현 등

○ BT 기술의 발달로 농어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성 증대

나 대내적 여건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 환경이 급변

○ 인구 고령화와 싱글가족 증가로 농식품시장의 타깃이 변화하고,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소비패턴도 '十人十色'화

○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지속 성장

* ('06) 13,106억원 → ('07) 21,799 → ('08) 31,927 → ('09) 37,355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녹색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 크게 부각

○ 지구 온난화, 환경문제 및 자연자원 고갈로 농업을 비롯한 여러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

○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08.8.15, 대통령 경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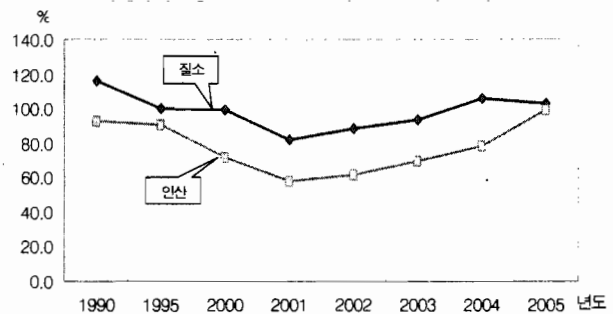
□ 고투입·고산출의 농법 확산 및 식생활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른 환경부하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위협

○ 집약적 과투입 농업으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 가중

* 양분초과량 : (질소) 23.5만톤, (인산) 11.2

* 양분초과율 : (질소) 102.7%, (인산) 99.1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초과율 변화 추이>



○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양분수지가 제일 높은 수준

* 양분수지 : 단위면적당 양분 투입량에서 산출되는 양을 뺀 값(남은 양분량)

< 주요 국가의 질소 수지 비교('00~'02) >

	한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독일
질소수지 (kg N/ha)	240 (1위)	229 (2위)	199 (3위)	166	120

< 주요 국가의 인산 수지 비교('00~'02) >

	룩셈부르크	일본	한국	벨기에
인산수지 (kg P/ha)	57 (1위)	52 (2위)	48 (3위)	20 (4위)

2. 잠재력과 기회요인(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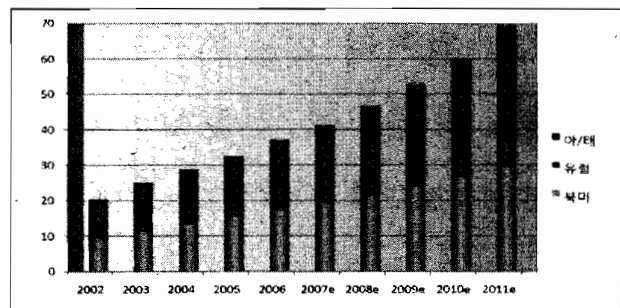
□ (농식품 시장 확대) 세계 농식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3.9% 증가하며, 특히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연 20% 내외 성장

○ 전세계 인구증가 및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의 경제발전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

* 농식품 시장규모 : ('03) 33,960억불 → ('10) 43,910 → ('20) 63,530

○ 친환경, 웰빙, 식품안전 등 안전·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글로벌 유기농식품 시장이 확대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10억USD)

○ 아시아 국가의 식문화 유사성, 근접성 등의 강점을 활용할 경우 큰 시장으로 활용 가능

* 서울 기점 반경 2,000km이내에 15억 인구나 7,400억달러 규모의 식품시장 인접

- 특히, 유기농식품의 동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크게 증가

* 아/태 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특히, 일본은 약 30%로 가장 상승세)

□ (소비자 선택 기준 변화)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가격과 양에서 건강과 영양·안전 등 가치로 변화

○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 증가

- 이력추적을 통한 정보제공, 식품안전체계 확립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트렌드	주요 내용
환경 친화적 식품	* 원산지, 생산방식, 성분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자연·신선 식품	* 식품안전성 문제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식품 선호
식품안전성	* 광우병, 멜라민 사태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 증폭
건강식 곡물 인기	* 통곡물(whole grains) 등 건강식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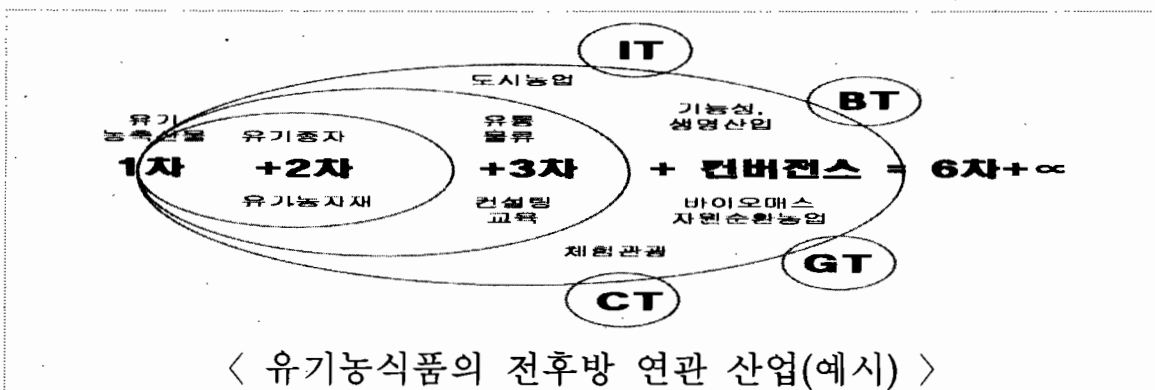
* source: WebMD(건강정보 전문사이트, '09)

□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기후변화를 새로운 농식품 산업 성장을 창출하는 기회요인으로 활용

- 원료 원거리 수송에 따른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로컬푸드 선호 트렌드를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
 - * 친환경농산물 지역생산-지역소비(학교급식) 체계 추진
- 친환경농산물과 탄소표시제의 연계, 소비자의 저탄소 소비 유도
 - * 1차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탄소배출량 DB 구축 추진

□ (타분야와의 유기적 연계) 전후방 산업의 연계 발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친환경농식품 전 과정에 연관된 전후방 산업이 성장 가능
 - * 「유기농식품 산업」이 녹색투자의 저변 확충을 위한 핵심녹색성장과제로 선정('10.4)



제3장.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추진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실태

가 생산 현황

-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생산은 매년 20% 이상 급성장
- '09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천ha(전체면적 대비 11.6%)로 최근 5년동안('05~'09) 약 60%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구분	'01	'05	'07	'08(A)	'09(B)	증감 (B/A)
농가수(천호) (전체 농가수 대비, %)	5 (0.3)	53 (4.2)	131 (10.7)	173 (14.2%)	199 (16.6%)	26 (2.4%P ↑)
재배면적(천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5 (0.2)	50 (2.7)	123 (6.9)	174 (9.9%)	202 (11.6%)	28 (1.7%P ↑)
생산량(천톤) (전체 생산물 대비, %)	87 (0.2)	798 (4.4)	1,786 (9.7)	2,188 (11.9)	2,358 (12.2)	170 (0.3%P)

- 친환경 인증유형별로는 저농약의 증가세('08년까지 연평균 85%)가 가장 뚜렷하나,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면서 저농약인증 면적이 다소 줄어든 반면, 무농약인증 면적이 대폭 증가

구분	'01	'03	'05	'07	'08	'09	전체 대비
유기농산물(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450 (9.9)	3,327 (14.9)	6,095 (12.2)	9,729 (7.9)	12,033 (6.9)	13,343 (6.6)	0.8(%)
무농약(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1,293 (28.4)	6,756 (30.4)	13,803 (27.7)	27,288 (22.2)	42,938 (24.7)	71,039 (35.2)	4.1(%)
저농약(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2,811 (61.7)	12,154 (54.7)	29,909 (60.0)	85,865 (69.9)	119,136 (68.4)	117,306 (58.2)	6.7(%)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출하량은 채소류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채소류(29.4%) > 과실류(25.2) > 곡류(18) > 과채류(14.7) > 서류(3.5)

- 다만, 과실류는 유기가 1.5%, 무농약 3.9%, 저농약 94.6%로 저농약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

단위: 톤, %

	곡류	서류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기타	합계
유기	26,228 (6.7)	4,070 (5.2)	8,227 (1.5)	16,007 (5.0)	45,779 (7.1)	14,338 (7.2)	114,649 (5.2)
무농약	106,625 (27.1)	33,832 (43.5)	21,807 (3.9)	54,674 (17.0)	167,283 (26.0)	170,371 (85.3)	554,592 (25.3)
저농약	260,748 (66.2)	39,879 (51.3)	522,181 (94.6)	250,848 (78.0)	430,284 (66.9)	15,130 (7.6)	1,519,070 (69.4)
합계	393,601 (100.0)	77,781 (100.0)	552,215 (100.0)	321,529 (100.0)	643,346 (100.0)	199,839 (100.0)	2,188,311 (100.0)

주: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 주요 품목류의 인증단계별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전체 44.2%를 나타낸 가운데, 곡류가 약 71%로 가장 높은 성장세 유지

* 증가율 : 곡류(70.7%) > 서류(59.7) > 채소류(42.8) > 과실류(39.2)

□ '09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수(생산량)는 4,441농가(309천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

○ 유기축산은 유기사료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무항생제축산은 100% 이상 증가

- 유기축산물 : ('05) 18농가/0.3천톤 → ('08) 162/11 → ('09) 95/12

- 무항생제 축산물 : ('08) 2,742농가/137천톤 → ('09) 4,346/299

나 유통 실태

-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은 1.2~2.0배 정도이며, 점차 감소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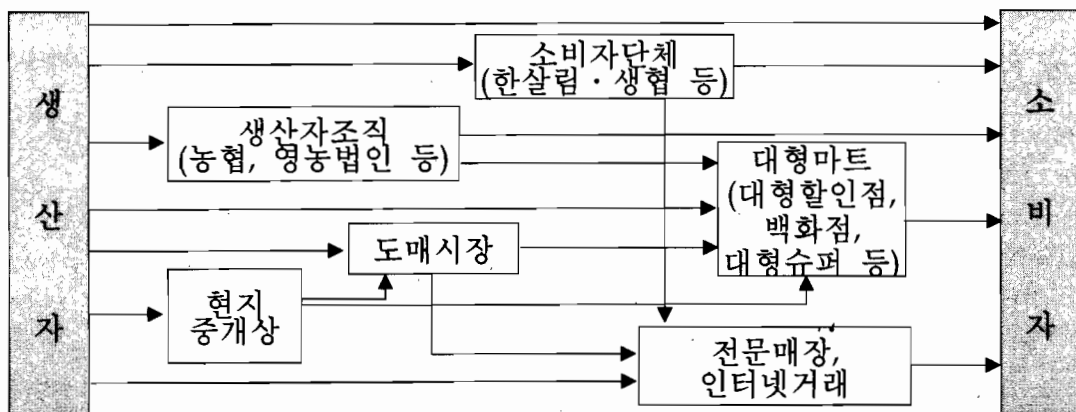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지수 동향〉

품목		'06	'07	'08	'09	'10(p)
곡류	유기농	2.1	2.0	1.9	1.9	1.9
	무농약	1.6	1.5	1.5	1.5	1.4
	저농약	1.3	1.3	1.3	1.2	1.2
채소류	유기농	1.8	1.8	2.0	1.8	1.7
	무농약	1.7	1.7	1.8	1.7	1.6
	저농약	1.5	1.1	1.3	1.4	1.3
과일류	유기농	-	-	1.8	2.7	1.9
	무농약	-	-	1.5	1.5	1.6
	저농약	1.9	1.2	1.4	1.2	1.0

주)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팀

-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직거래와 소비자단체를 연계한 유통비중은 감소, 대형마트 및 전문유통업체 비중 증가
- 생산자조직과 대형마트(50%), 생협 등 소비자단체(20%), 전문매장 및 인터넷(15%), 직거래 비중(15%) 차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경로〉



주)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다 | 시장 전망

□ 2009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약 3조 7,355억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다만, '10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신규 폐지됨에 따라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점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의 약 20% 차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5	2020
곡류	5,242	7,751	9,069	10,090	13,462	13,834	19,866
쌀	4,660	7,218	8,445	9,370	12,396	12,605	18,100
채소류	6,238	10,814	12,653	13,798	17,008	16,479	23,665
과실류	7,134	9,074	10,617	10,912	9,937	5,047	7,248
서류	590	1,144	1,338	1,527	2,180	2,479	3,559
특작·기타	2,596	3,143	3,678	4,613	8,369	11,377	16,337
총계	21,799	31,927	37,355	40,940	50,955	49,216	70,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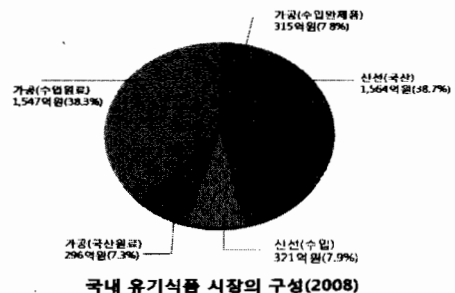
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 국내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4,043억원 수준('08)이며, 연평균 26%의 성장세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유기농산물은 1,885억원(46.6%), 유기가공식품은 2,158(53.4%) 차지
- 유기가공식품에서는 국산원료(296억, 13.7%), 수입원료(1,547억, 71.6%), 수입완제품(315억, 14.7%)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86.3%를 차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성장률
유기농산물	1,114 (44.0%)	1,427 (45.4%)	1,885 (46.6%)	30.1%
유기가공식품	1,419 (56.0%)	1,719 (54.6%)	2,158 (53.4%)	23.3%
계	2,533	3,146	4,043	26.3%

주: 소비자가격 기준, ()안은 구성비(%)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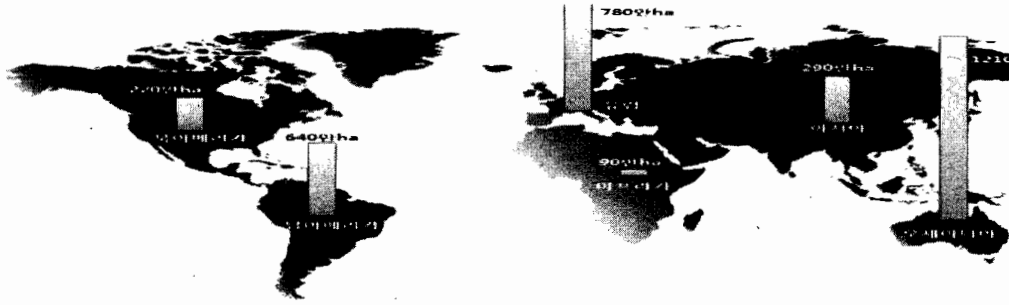
2.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 규모

□ 세계 120개국 3,523만ha에서 유기농업 실천

- 오세아니아(38%) > 유럽(24%) > 남미(20%) > 아시아(9%) > 북미(7%)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

자료: IFOAM(2009)



□ 주요 OECD 국가들은 유기농업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

- 국가별 유기농 실천면적의 경우, 호주가 1,202만ha로 가장 넓고, 미국(194만ha), 중국(185만ha), 스페인(113만ha) 순임
- 관행농업 대비 유기농 실천 면적비중 측면에서는 유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스트리아(17.4%) > 스웨덴(10.8%) > 이탈리아(7.9%) > 독일(5.4%) 순

〈 세계 주요 OECD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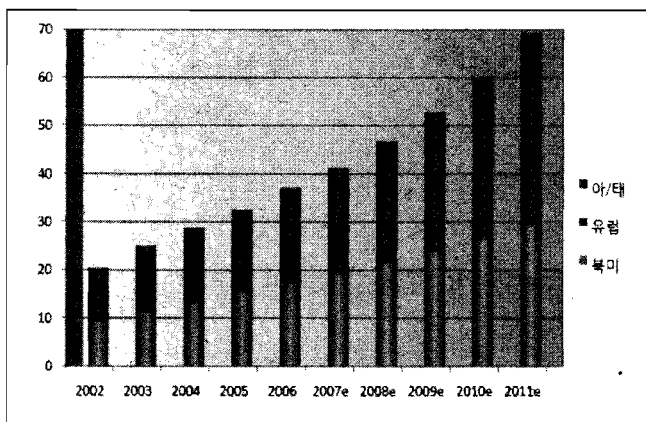
구 분	호 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 국	영 국	독 일	스 페인	프 랑스	캐 나 다	오스트리아	스 웨덴	일 본	중 국	한 국	전 체
재배면적 (천ha)	12,023	50	1,002	1,949	737	908	1,130	581	628	492	336	9	1,853	13	3523
총재배면적 대비비율(%)	2.8	2.6	7.9	0.6	4.6	5.4	4.5	2.1	0.9	17.4	10.8	0.2	0.3	0.8	0.8

* 자료 : IFOAM(2010)

□ 2008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거래액은 약 468억 달러

- (전체) 시장 유통규모는 2002년(219억 달러)의 두 배이상 증가
 - 지난 몇 년간 크게 성장한 북미, 유럽 시장의 성장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증가
 - * 특히,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로 가장 상승세

〈주요 국가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10억USD)



	2007	2008	CAGR (연평균성장률) ('02~'06)	CAGR ('07~'11)
세계	41.5	46.8	13.8%	12.8%
북미	19.2	21.3	17.1%	11.1%
유럽	17.4	19.8	15.3%	15.1%
아/태	4.6	5.6	15.4%	20.5%
미국	17.7	19.6	16.6%	10.4%
독일	4.8	5.4	11.3%	12.2%
영국	3.2	3.6	17.9%	11.8%
일본	0.89	1.19	22.1%	29.8%

* 자료 : World organic foods and beverage report, RNCOS(2007), IFOAM(2009)

- (유럽) 세계 유기농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유럽 유기농 시장규모는 약 250억 달러로 매년 10% 이상 성장
 - * 독일(50억달러) > 영국(32) > 프랑스(26) > 이탈리아(25) 순임
- (미국) 1997년에 36억달러에서 2008년은 196억 달러로 5배 이상 급속히 성장
 - 제품 수요가 국내 공급량을 초과함에 따라 2002년 이후 수입량 지속 증가
 - 2008년부터 국내 유기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지출 대폭 확대
 - * 유기농업분야 정부지출 : ('02) 2천만달러 → ('08) 1억 5백만달러 (5배 증가)
- (중국) 녹색식품 육성전략('96)에 힘입어 유기농식품 수출 국가로 급부상

- 녹색식품 생산량은 7,200만톤, 검사면적은 1,000만ha에 이르며, **매년 30% 이상 성장**
- * '06년 생산량은 우리나라(1,128천톤, '06) 보다 64배, 면적은 133배 수준
- 2006년 수출 규모는 19.6억달러로 **매년 37% 수준 증가**

〈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 소비, 수출현황 〉

구 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개)	544	742	1,217	2,047	3,695	4,615	30.5	
상품수(개)	892	1,353	2,400	4,030	9,728	12,868	39.9	
생산량(만톤)	630	1,106	2,000	3,260	6,300	7,200	29.2	
소비액(억위엔)	240	302	500	723	1,030	1,500	24.6	
수출액(억달러)	0.7	1.3	4.0	10.8	16.2	19.6	37.4	
검사 면적	(만무) (만ha)	3,213 214	3,563 238	5,800 387	7,710 514	9,800 653	15,000 1,000	20.9

주: 1畝(1무=200평). (녹색식품 : 무공해식품 + 녹색건강식품 + 유기농식품)

자료: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2009).

- (일본) 유기농식품 수요증가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유기농 인증 크게 확대
 - 2007년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인증은 53천톤이나, 해외인증은 1,902천톤으로 전체 유기농 인증 물량의 97.3% 차지
 - 유기 가공식품 인증 실적은 국내 인증이 134천톤으로 매년 11.9%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해외인증은 165천톤으로 매년 54.1% 증가

◇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가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일본의 해외인증 급증과 유럽 선진국, 미국의 유기농산물 공급 부족은 국내산 유기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을 통한 수출 전략 필요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구매 형태 (KREI, 2008)

□ (소비 계층)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40~50대의 소득 수준이 높은(순소득 월 400만원 이상) 계층이 주요 고객

○ (유형) 지속적 소비계층(1개월 4회 이상, 20%) > 보통 소비계층(1개월 4회 미만, 55%) > 관심 계층(6개월에 1회 이상, 25%)

○ (소비 의향) 구입 경험자 중 “구입비중 현수준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비중이 약 8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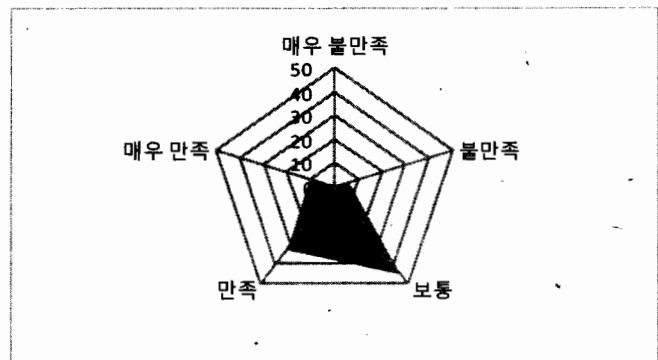
□ (구입 동기)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가족의 건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가족의 건강(61.3%) > 영양가(11.8%) > 환경보호(6.8%) > 인증제도 신뢰 순

○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따른 건강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긍정적인 답변이 약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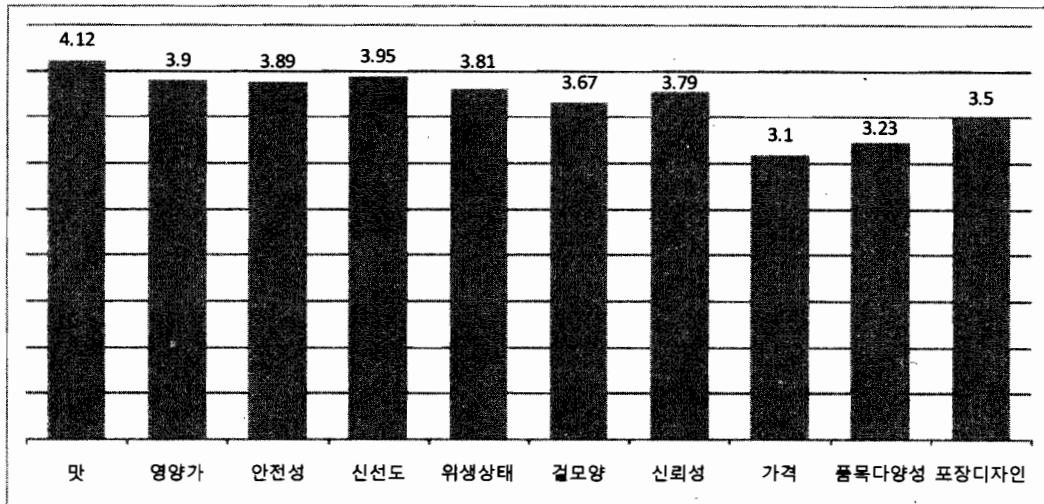
* 약간 좋아짐(35%) + 많이 좋아짐(23%) > 별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함(40%)

□ (만족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대비 품질 조사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0% 정도 차지, 대체로 만족하는 편



○ (속성별 만족도) 맛·신선도·영양가 등에 대해서는 높게 나온 반면, 가격·품목다양성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의 속성별 만족도〉



- (가격 만족도) 소비자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품목다양성 및 포장디자인) 소비자는 맛·영양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매욕구에 맞는 상품 공급체계도 원하는 것으로 조사
- (구매처) 구입의 편리성, 품목다양성 등 쇼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한 대형할인마트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
 - * 대형할인마트(46%) > 농협계통(22%) > 전문유통업체(11%) > 생협 등 직거래단체(7%) 순
- 제품의 본질적 가치인 상품 신뢰성 이외에 품목다양성, 주차 편리성 등 One-stop 쇼핑의 용이성 등이 중요한 이유로 조사
 - * 구입의 편리성(37%) > 다양한 품목 및 지속적인 공급(22%) > 판매처의 신뢰(21%) > 저렴한 가격(13%) > 다양한 판촉행사(5%) 순
- (애로사항)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뢰성 문제” 보다 “가격 문제” 로 조사
 - * 가격이 비싸서(45%) > 신뢰성 저하(31%) > 지속적인 공급의 부재(12%) 순

□ (신뢰도) 친환경농산물의 세 가지 인증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입 유기농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임

○ (인증단계 이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소비자가 약 20%에 불과,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

○ (인증기관 신뢰도) 2~3년 내에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가 인증기관을 신뢰(약 60%)

○ (국내외 유기농산물 안전성)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82.4%)이 수입 유기농산물(4.3%)의 비중을 압도

* 유기가공식품의 비중 : 국내산 원료(13.7%) + 수입산 원료(71.6%)

□ (판로 확대)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학교급식 확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우선 순위) 학교급식(58%) > 가공제품 개발(20%) > 홍보활동 강화(14%) > 병원·기업 등의 급식(8%) 순임

* “미취학 아동 또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대상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반응 조사결과 약 90%가 찬성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을 20~30% 정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 부문의 적절한 대책 필요

◇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 Needs 및 다양한 구매욕구에 맞는 상품 공급체계 필요

- 농산물 소비 성향에 따른 구매계층별 대응전략 마련

* 고학력·맞벌이 부부, 아토피 치료 등 건강 Care용, Kids 마케팅 등

제4장.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06~'10) 평가

1. 2차 육성 5개년 계획 성과

2차 육성 5개년('06~'10)계획 성과

□ 친환경농업 추진 성과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수 : ('05) 53천농가 → ('09) 199(3.7배 증)
-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 ('05) 50천ha → ('09) 202(4배 증)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5) 798천톤 → ('09) 2,358천톤(3배 증)
 - 전체 농산물 대비 비중 : ('05) 4.4% → ('09) 12.2(2.8배 증)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축(출하량 기준)

- 화학비료 : ('05) 374kg/ha → ('10p) 242 (35.6% 감축)
- 합성농약 : ('05) 11.8kg/ha → ('09) 9.9 (16% 감축)

□ 친환경농업 예산 지원

- 친환경 예산 : ('00) 554억원 → ('05) 1,470 → ('10) 5,613

◇ (생산량)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율 10%를 조기 달성

◇ (화학비료) '1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35.6% 감축 (목표 30%)

◇ (농약) '09년까지 농약 사용량 16% 감축 (목표 30%)

⇒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목표치 달성

2. 부문별 추진 성과

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 (농업환경 조사) 농업환경지도 작성과 농업환경자원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농촌진흥청)
 - GIS를 이용한 농업환경자원정보 통합 관리(흑토람) 시스템 구축, 대국민 농업환경정보 제공
 - 작물별 재배적지지도(49작물) 및 토양전자지도(50종) 등 제공
- (흙 살리기)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 지력 증진
 - 토양개량제('05: 637천톤 → '10: 811), 녹비작물재배('05:104천ha → '10: 144) 및 유기질비료('05: 70만톤 → '10: 250) 공급
 - 퇴비등급제 도입 및 등급별 차등지원('10.7)으로 우량퇴비 유통 확대 및 품질 향상 제고
 - 유기물, 수분, 무기물 함량을 평가하여 품질등급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R&D) 작물별 한국형 유기농업 재배기술 종합모델 개발 및 보급
 - 벼, 고추, 상추 등 유기재배 매뉴얼 6종 12,000부 제작 배부
 - ('05) 벼 → ('06) 상추 → ('07) 배추·딸기 → ('08) 당근 → ('09) 고추
 - 유기농업기술위원회 등을 통한 산·학·연·농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나 친환경농업 생산 인프라 및 가축분뇨 관리

- (생산 인프라)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1,000ha이상) 및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지정 확대(~'10: 1,047개)
 - 친환경농업지구('06~'10: 278개) 신규 조성, 기반 확충
 - 광역친환경단지(27개소) 신규 도입, 시·군 수계 단위의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 (병해충 방제) 화학농약 감축 등을 위한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사업 지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매년 2,000ha 수준 천적방제 지원('05~)으로 시설원예농가의 해충 방제 조기 정착 추진(평균 730만원/ha, 9개 작목)
 - * ('05) 300ha → ('06~'07) 1,000 → ('08) 2,000 → ('09~'10) 2,500
 - 친환경 인증 농가 등에 매년 1,000ha 수준의 미생물 농약 지원, 화학농약 감축 유도(평균 420만원/ha, 10개 작물)

-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및 해양투기량 감축 추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07)의 연차별 확대 추진, 해양 투기 물량의 점진적 감축
 - * 시설 설치 : ('07) 5개소 → ('08) 14 → ('09) 20 → ('10) 17 (56개소)
 - * 해양 투기 : ('06) 261만톤 → ('07) 202 → ('08) 146 → ('09)117
 - 가축 분뇨 자원화율 확대와 퇴·액비 이용·유통 활성화
 - * 자원화율 : ('05) 80% → ('07) 83.7% → ('08) 84.3 → ('09) 85.6

다 소비유통 분야

- **(유통기능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를 위한 대량유통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추진('09~'12), 물류비 절감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확보**
 - * 총사업비('09~'12) 480억원(경기도 광주)
 - **강서시장 내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설치 추진('10.3)**
 - * 총사업비('09~'10) 96억원, 최대 300학교 물량(1,100명/학교당) 처리
- **(소비 촉진) 친환경농산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유치원 원장·학교급식 관계자 등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친환경농산물 관련 교육 실시**
 - * '09년 현장체험 참가 276개교 중 139개교가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 전환(51.3%)
 - * ('09~'10) 급식 관계자(학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등) 2,000여명 교육 추진
 - **자조금과 홍보비 등을 활용한 TV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소비자 신뢰도 제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 **도별로 2~3개의 거점 인증기관을 육성하여 인증을 유도하고, 생산(분기 1회) 및 유통과정(반기 1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부실인증 방지 등을 위한 인증기관 취소근거 마련('10.2)**
 - **인증농가 사후관리 등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10.3)**

3. 지금까지의 친환경 농정에 대한 반성

□ (생산) 친환경농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10년 부터 신규 인증이 폐지된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대다수 차지

* ('07~'08) 친환경농산물의 약 70% 차지(단, '09년도에는 58%로 감소)

○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농 비율은 감소 추세

*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 비율 : ('99) 26.3%→('02) 10.5%→('06) 8.5%→('09) 4.6%

□ (성장동력 창출) 그동안 생산기반 조성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가공 및 연관 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 생산기반 조성, 투입재 지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전체 예산의 97%)

○ 1차 산업(생산)과 식품·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 미흡

○ 소비자의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이를 산업화하는 투자 확대 등 소홀

□ (기술 개발) 유기농업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유기축산·유기과수 등 대상품목 확대에는 한계

* '10년 현재, 유기재배 매뉴얼이 6개 작물에 불과(축산은 전혀 없는 상황)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현장 적용 가능한 과수·임산물 등의 무농약 이상 재배 기술 및 보급 미흡

* 과실은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약 95%가 저농약에 해당

○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개발이 미흡,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미진

* 유기농식품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전무

□ (환경 부하) 친환경농업 생산은 확대가 되었으나,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 부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농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스템 결여, 친환경농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 설정 애로

* OECD의 경우, 농업환경지표(흙, 물, 생물다양성(biodiversity), 공기 등 13개 부문별 세부지표로 구성)를 통해 환경 규제 강화

○ 소규모 집약적 과투입 농법으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환경 부하 가중

*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 소비량은 감소하나, 양분잉여량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

□ (인증 관리) 친환경농업 확산 초기에 엄정한 인증관리시스템 가동 미비

○ 친환경농산물이 매년 20~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생산·유통 과정상의 부실인증사례 증가

* 부정유통 고발건수 : ('05) 18건 → ('07) 29 → ('08) 82 → ('09) 121

◇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 필요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필요

◇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에 따른 무농약 이상 전환 대책 필요



“新” 친환경농업 비전과 추진 전략

제1장 “新” 친환경농업 비전 및 정책 목표

제2장 “新”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제3장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추진체계

제1장. “新” 친환경농업 비전 및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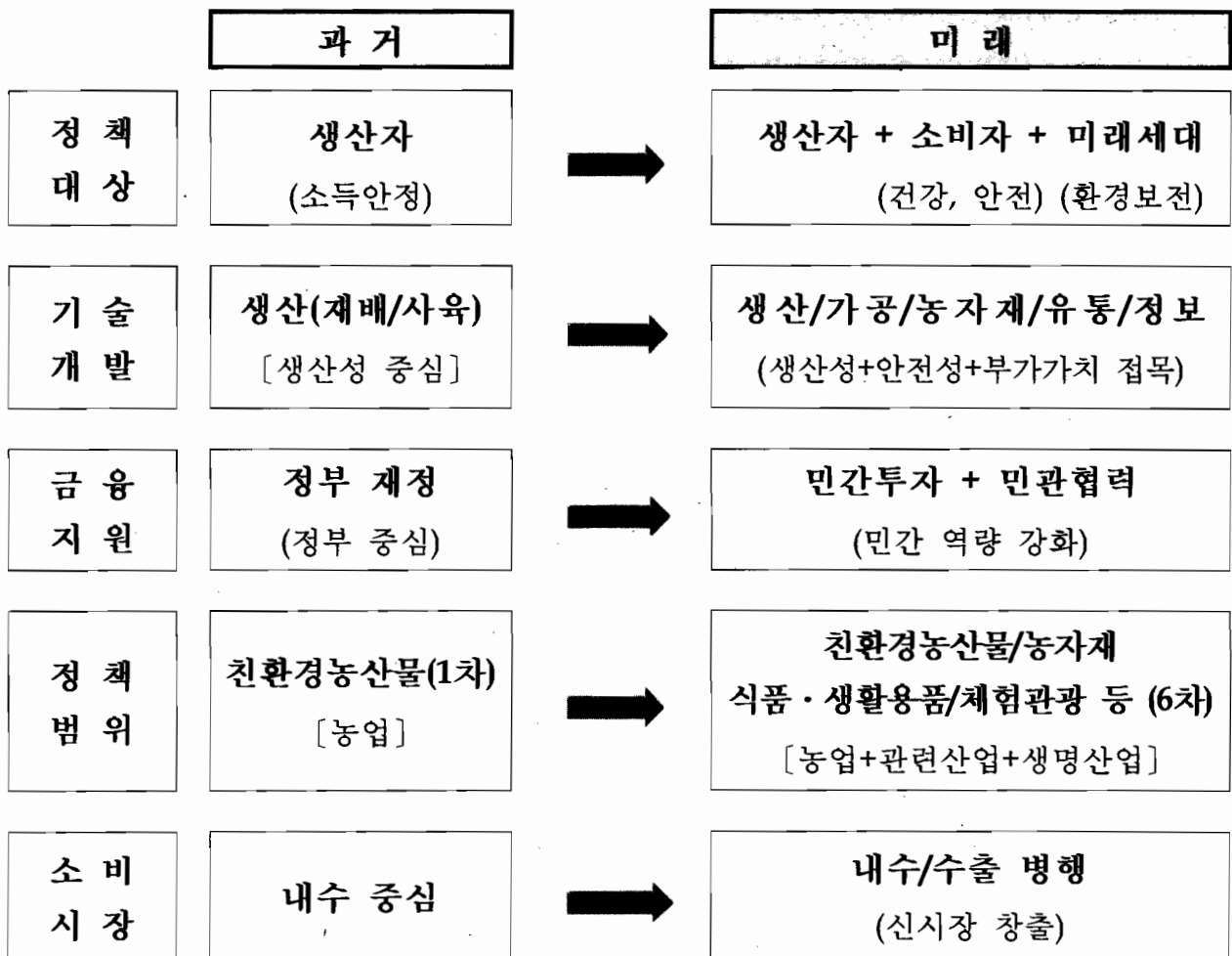
1.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으로 전환 추진

◇ 1차 산업(생산)의 한계를 벗어나 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도화 전략 추진

⇒ 친환경농식품 및 연관산업을 차세대 녹색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2. 비전 및 3대 핵심 가치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

I 생산자를 '잘 살게' 하는 친환경농업

- 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
- ② 친환경농식품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

II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 ③ 소비자의 가치(건강, 영양, 안전 등)를 증진시키는 식(食) 산업
- ④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가공식품, 로컬푸드 등)

III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 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자연친화적) 친환경농업 육성
- ⑥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기반 제공

◇ 비전과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7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3.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
- ◆ 연차별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매년 3% 이상 감축
- ◆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 확대 : ('10) 5.5천억 → ('15) 2조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 목표 : ('09) 4.9% ⇒ ('12) 7.8 % ⇒ ('15) 12%

(단위: ha, %)

구 분	2009	2012	2015
무농약 농산물(A, 비중)	71,039 (4.1)	99,879 (5.9)	145,316 (9.0)
유기 농산물(B, 비중)	13,343 (0.8)	31,808 (1.9)	47,966 (3.0)
전체 경지면적(C)	1,736,000 (4.9)	1,688,400 (7.8)	1,638,000 (12.0)

* 2010년 이후 약 5%의 저농약 재배면적이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 무농약의 약 10%가 유기로 전환(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 KREI)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축(kg/ha) (매년 3% 이상 감축)

- 화학비료 사용량 : ('10) 242 ⇒ ('13) 220 ⇒ ('15) 205 (15% 감축)
- 농약 사용량 : ('09) 9.9 ⇒ ('13) 9.1 ⇒ ('15) 8.4 (15% 감축)

□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

- 목표 : ('08) 4,043억원 ⇒ ('10) 5,505 ⇒ ('13) 16,830 ⇒ ('15) 20,000

* ('06~'08년)치의 추세치를 반영하되(연평균 성장률 26%), 핵심녹색성장과제 선정 및 저농약 폐지 등을 감안하여 산출

4. 분야별 주요 육성 지표

전략 분야	주요지표	단 위	전 망			비고
			2010	2013	2015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 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개소	1,020	1,150	1,300	누적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개소	27	44	60	누적치
	유기농 특화단지(생태마을 등)	개소	-	25	50	누적치
	유기질비료 공급 물량	만톤	250	300	350	
	녹비작물 재배 면적	천ha	140	170	200	
	가축분뇨 자원화율	%	85	87.5	90	누적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유기농 쌀)	천원/10a	1,100	990	880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억원	400	550	700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소	3,200	4,100	5,000	누적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시장규모)	억원	37,000	43,500	50,000	
	생협의 고정소비층(회원수)	만명	50	75	100	누적치
	친환경농산물 수출액	만불	200	2,000	5,000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 조사	천개소	40	43	45	
	친환경농산물 시판품 조사	천개소	12	15	17	
	GAP농산물 면적 비율	%	2.7	5.0	7.0	
	농식품의 안전성 조사	천건	64	70	75	
가공 및 농자재산업 활성화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지원(업체)	개소	-	50	100	누적치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개소	-	1	3	누적치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목)	개	1,070	1,900	2,750	누적치
	유기농자재 수출액	만불	500	2,000	5,000	누적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 성	유기농 매뉴얼 구축(품목)	작목/축종	6/0	10/3	15/6	누적치
	전문기술 보급사업단(개소)	개소	-	4	9	누적치
	가공식품 기술 산업화(건수)	건	-	10	20	누적치
	친환경농업 교육 지원(대상)	명	2,000	3,000	4,000	
농업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자원정보 D/B 구축	점	3,300	4,500	5,000	
	토양검정 분석수(점)	만점	48	65	75	
	토양정보관리시스템 활용(건) 수	만건	210	280	350	
친환경 축산임업 ·수산업 육성	친환경 축산물의 비중(%)	%	7.3	10	13	누적치
	활엽수 조림 면적(천ha)	천ha	4.7	4.9	5.0	누적치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개소)	개소	600	1,420	1,610	누적치
	친환경인증 수산물의 품목	개	10	15	20	누적치

제2장. “新”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1. 여건 분석 (친환경농업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 친환경농산물의 양적 성장 ▶ 친환경농식품 분야가 녹색 산업으로의 가치 증대 ▶ 농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국민의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투입·생산성 저하에 따른 고비용 체제(경쟁력 약화) ▶ 고온다습 환경, 집약적 재배 방식에 따른 자재 의존도 높음 ▶ 생산 외 가공·유통·수출 기반 취약 ▶ 정부중심, 민간역량 취약 (정부의존도가 높음)
기 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기농 시장 성장률 급등(연평균 20%) ▶ 중국, 일본시장의 성장 ▶ 식품안전성·차별성 중시 (소비자의 선택 기준 변화) ▶ Local Food 수요 증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장의 성장 	<S-O전략>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업 차세대 녹색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안전·건강·저탄소에 기반한 「녹색소비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추진 - 학교급식 시장 적극 대응 ◆ 유기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동아시아 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低투입 농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보급 유도 ◆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 및 주요 통계 정보 강화 ◆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名品化 기반 구축 방안 수립 ◆ 친환경(녹색) 기술 및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위 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유기농식품과의 경쟁 가속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자원·환경 제약 ▶ 저농약농산물의 신규 인증 폐지(‘10) ▶ 유기(친환경)농업 가치 불인정 등 외부 시각 잔존 	<S-T전략>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형 농어업 전환 -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무농약 이상 전환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교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 활동 등과 연계 - 맞춤형 소비자 교육 강화 ◆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농약(유기) 매뉴얼 마련 ◆ 민간 주도의 친환경(녹색 식생활) 운동 네트워크 구성

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가 분야별 추진 전략

생 산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농업 정착
- 친환경농법/자재 공급 확대로 토양 지력 증진
- 저투입농법 및 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 안정화

유 통



- 권역별 산지 유통 거점조직 육성, 유통경로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으로 유통비용 절감
-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소비지 유통 활성화

소 비



-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로 신뢰 향상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식품 대외 수출 활로 적극 모색

가 공



-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유기(친환경)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지원

농자재



- 유기농자재 산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유기농자재의 효과 규명 및 검증
- 우수업체 투자 유치 및 수출활성화 방안 모색

기술개발



- 유기생산 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 지원체계 구축
-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집중 개발
- 고부가 유기가공식품 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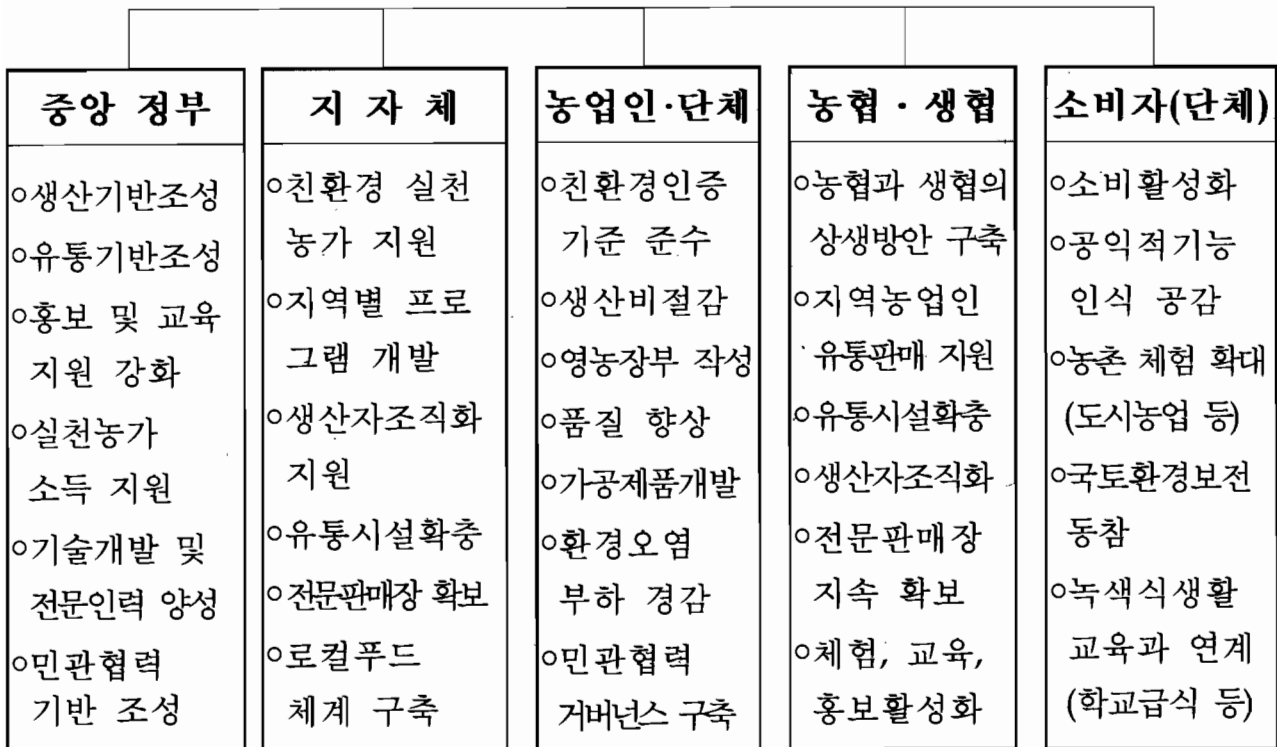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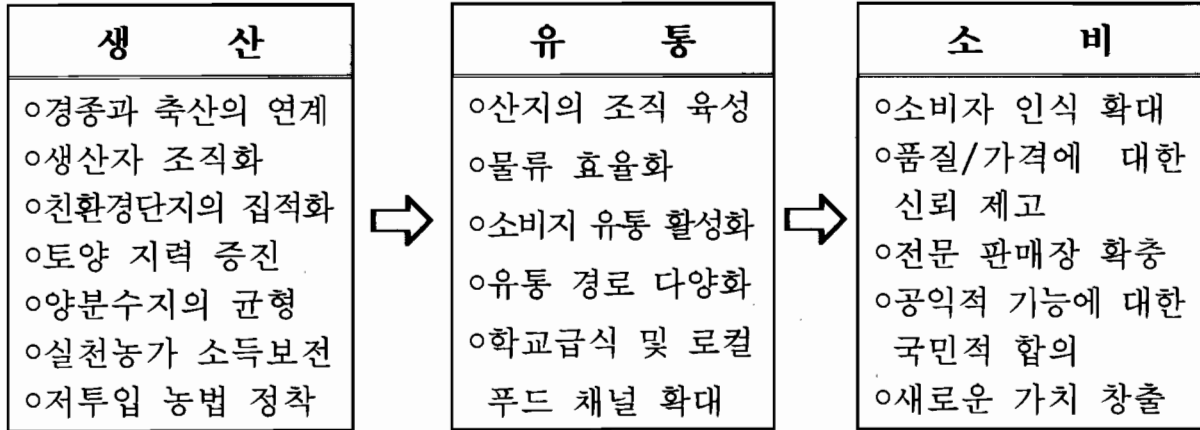
농업환경



- 국내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
- 지역단위 양분균형 달성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 농업환경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나 주체별 추진 전략

2015년 친환경농산물 12% 확대



농업인·소비자(단체)·지자체·정부 등의 상호 역할 분담 중요

제3장.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추진 체계

1.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체계

비 전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
핵 심 가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를 ‘잘 살게’ 하는 친환경농업 ■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면적(비율) : (09) 4.9% → (15) 12%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 ‘15년까지 15%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 (‘10) 242kg/ha → (‘15) 205 - 농약 : (‘09) 9.9kg/ha → (‘15) 8.4 ■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 : (10) 5.5천억 → (15) 2조
핵 심 과 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③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④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⑥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⑦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2. 7대 핵심과제

7대 핵심과제	단위과제 (43개)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확대 ○ 토양 지력 증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보전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 ○ 유통 경로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 ○ 해외 마케팅 구축 지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정비 ○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 ○ 친환경 녹색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친환경 축산·임업· 수산업 육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축산 확대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친환경 임업 기반 조성 ○ 친환경 녹색 수산업 육성



제 3 편

“新” 친환경농업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제1장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제2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제3장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제4장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 제5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제6장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제7장 친환경축산·임업·수산업 육성

제1장.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정책 목표

-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주요 과제

- ① 친환경농업(유기농) 전문단지 확대
- ② 토양 지력 증진(흙 살리기 추진)
- ③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확대
- ④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보전

정책 지표

- ◆ 친환경농업 지구 : ('10) 1,020개소 ⇒ ('15) 1,300
-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10) 27개소 ⇒ ('15) 60
- ◆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 ('10) 신규 ⇒ ('15) 50개소
- ◆ 유기질비료 공급 물량 : ('10) 250만톤 ⇒ ('15) 350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10) 140천ha ⇒ ('15) 200
-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0) 85% ⇒ ('15) 90
- ◆ 유기농산물 생산비(쌀) : ('09) 1,100(천원/10a) ⇒ ('15) 880 (20% 절감)

1.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확대

【 추진 방향 】

- ◇ 친환경농업지구 · 광역친환경단지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 성과제고 및 효율적 단지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 지역밀착형 및 품목별 유기농 특화단지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품목)의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단지) 조성
 - 사업메뉴와 사업비 지원 비율 등을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
 -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시설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지구조성 지원
 - 친환경농업 기술 발전에 따른 시설·장비지원 확대
 - 쌀 중심의 친환경 지구 및 단지 조성 사업을 다양한 품목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요건의 탄력성 부여
 - 사업규모가 중심이 아닌, 품목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인증량)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체계 구축
 - * (기존)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개선) 품목별 다양성 등을 평가, 예산 지원

□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이 실천가능한 지역으로서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 지원
 - 사업 대상 지구의 신규 조성시 무농약 이상 취급비율 확대
 - * ('11) 저농약농산물 취급비율 전체 대비 최대 40% → ('12) 30% → ('15) 0%
- 광역단지 및 지구 조성 지역 선정시 품목별 생산·가공·유통 등의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
 - 가공 및 농자재 산업 등을 통한 지역(마을)의 소득보전 및 다양한 부가가치 증진이 가능한 지구(단지) 육성 유도
- 시설위주(H/W)의 지원에서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의 분야(S/W)로의 점진적 확대 추진
 - 친환경농가 집적화, 공동출하를 위한 품목별 교육, 광역단지 사업추진단 운영 등

□ 성과제고 및 효율적 단지 운영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의 사후관리 강화

-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될 '지구 및 광역단지 운영 지원 사업단(가칭)' 설치
 - 친환경지구는 시·도별로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시·군별로 확대 적용 추진
 - 광역단지는 단지별로 시설운영(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영농지원(제조 및 위탁영농), 인증·관리, 교육 등 세부 사업단 구성
 - 향후 지역별 지구 및 단지 조성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지구 및 광역단지 연합협의체(가칭)' 추진 검토

○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및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의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및 친환경유통시설 등의 운영 방안이 사후관리의 핵심 관리사항임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생산자(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조직화·규모화를 기초로 한 산지유통시설의 가동율 제고

-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축분 퇴비의 마케팅 전략 수립

* 핵심전략 : 판매가격 인하, 신뢰성 제고, 차별화 등 홍보 강화 등

○ **총체적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시설 추가 지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등과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장차 친환경지구 및 광역단위 단지화를 통해 관광농업, 수출농업 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나 | 유기농 전문단지 확대

□ **친환경지구 및 광역단지 조성 내에 유기농산물 중심의 특화된 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 확대**

○ 친환경지구 및 광역단지의 지침 수정, 신규 조성 외 기존 지구의 유기농 명품화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기 조성된 친환경지구(~'10: 1,020개)의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지구의 유기농 생태마을 모델 구축

※ 추진 모델 방향

- (기준) 구성원(농가) · 전체 경지면적 · 유기 인증면적 등을 평가, 유기 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대상에 지원
- (사업내용) 유통 및 가공시설, 식당, 체험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 지원
- 매년 종합평가 후 지정기준 적합 마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 · 관리

- 기 조성된 광역친환경단지(~'10: 27개소) 내 유기농 면적을 확대, 지속가능한 '유기농 특화 단지'를 구축토록 유도
- 또한, 광역 단지 外 지역밀착형 및 품목별 유기농 집적단지를 특구로 구축, 정책 지원 방안 연계

□ 간척지의 계획적 활용을 통해 원료 생산 및 수출 주도형 유기농(친환경)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

- 유기농(친환경) 관련 생산 · 가공 · 유통 · 연구 · 교육시설 등이 연계된 클러스터 형태를 통해 차별화된 농식품 산업 단지 구축
 -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
-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전략 품목 (콩, 밀, 옥수수 등) 선정,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 간척지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치, 1·2·3차 농업이 통합된 Complex 형태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단지 도입
 - 오염부하가 많은 양돈을 제외한 한우·낙농·승마목장 등을 조성, 체험·교육·레저 기능을 추가하여 관광목장형 단지 조성

2. 토양 지력 증진

【 추진 방향 】

- ◇ 흙 살리기 운동의 전개로 토양지력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대
 - 토양개량제 · 유기질비료 · 녹비작물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 제고
- ◇ 토양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적합한 농자재 투입 체계 구축 (토양의 주기적인 건강 진단 → 정밀 농업 체계 구축)

가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추진
 - '15년까지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적정 수준인 157ppm 으로 높이고, 밭토양은 적정 토양산도인 pH 6.5까지 개량
 - * 규산의 성과목표 재설정 : (현재) 130ppm → (조정) 157
 - 공급량 : ('10) 811천톤 → ('13) 1,000 → ('15) 1,200
- 토양개량제 성과측정 방법 개선,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성과측정 대상을 토양개량제를 시비한 농경지로 한정, 유효 규산 함량 및 산도(pH) 등의 정확한 시비효과 측정
 - 토양개량제 시비 효과 측정시기를 토양개량제 시비이후 매년 다음연도에 전국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일관성 유지
 - '12년부터 3년 주기로 분석한 검정결과를 평균하여 국내 대표 성적으로 이용하여 일관성 유지

- 토양개량제 성과측정 자료를 농진청에서 별도로 관리·운영
 - 토양검정 시스템에 별도의 변수(field)를 신설하여 평가 및 비교
 - 토양개량제 시비 전후에 대한 토양검정 실시하여 효과 비교
 - * 농진청에서 세부적인 토양개량제 성과측정과 기준을 마련 및 운영

□ 토양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석회질 요구량 산정기준 개선

- 농경지의 경운방법이 축력에서 경운기 또는 트랙터로 변화되어 작토깊이 차이에 따른 토양 석회요구량 변화 필요
 - 적용 작토깊이 조정(cm) : (현재) 10 → (변경) 15
 - * 경운깊이(cm) : 축력 9~12, 경운기 12~14, 트랙터 18~20
- 석회의 연간 최대시비량(400kg/10a) 이상 공급방지를 위해서 Agrix 프로그램에 설정, 피해 방지
 - 석회를 최대시비량 이상 시비할 경우, 붕소 등 미량원소 결핍 및 알칼리 피해 발생

나 |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로 물질순환 촉진
- 공급 확대 : ('10) 250만톤 → ('13) 300 → ('15) 350

□ 퇴비의 품질등급제 도입 및 차등지원으로 품질향상 유도

- 퇴비의 유기물, 무기물, 수분 3개 항목을 평가하여 3개 등급

으로 구분하고 비종과 품질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

- 등급간에 차액을 확대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퇴비업체 전반에 대한 품질 향상 추진('12)
 - 1등급과 2등급간 차액 : (현재) 100원/20kg →(조정) 200
 - 2등급과 3등급간 차액 : (현재) 200원/20kg →(조정) 300

□ 정부지원 퇴비의 범위 설정을 통한 우량퇴비 공급

- 발효과정을 거쳐 충분한 부숙과정을 거친 우량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퇴비 범위 설정
 - * 부숙기준은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정부 지원 퇴비 범위

- 유기물을 유익미생물에 의하여 충분히 발효(부숙)시킨 비료로서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으로 작용

- '12년부터는 제조과정이 퇴비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협 및 퇴비 관련단체에서 대상업체를 조사하여 사전 통보

□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 조정 및 사업물량 배정기준 신설

- '11년부터 지방비가 의무 부담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권한을 지역조합에서 시·군으로 조정
- 시·군에서 농가당 지원기준은 작물별 시비처방기준과 신청 면적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결정
 - *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적용

다 녹비작물 재배 확대

□ '15년까지 겨울철 유휴지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200천ha로 확대

○ 재배면적 : ('10) 144천ha → ('13) 160 → ('15) 200

- 현재 2.2%인 유기물 함량을 3.0% 목표로 지속 증대 추진

○ 녹비효과 증진 및 녹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녹비작물의 혼파(화분과+두과작물) 유도 및 운용 지침 마련

- 녹비작물 사업수혜자의 비용분담 및 사료작물과의 융화책 마련 등

□ '15년까지 청보리와 헤어리베치 중심의 국내 자급체계 구축

○ 청보리 종자는 '15년까지 수입·공급 중인 호밀을 대체

○ 헤어리베치 종자는 '11년부터 국내에서 시범 생산·공급하고
'15년부터 본격 생산 추진

-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광지역성 품종 개발 추진

- 수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시설 확충

○ 농자재산업을 발전시키고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업체가 생산·공급토록 추진

□ 수입 대체를 위한 녹비작물종자 국산품종 개발

○ 헤어리베치를 포함 다양한 녹비용 국산품종 개발 및 적응 연구

- 대상자원 : 크림손크로버, 들묵새, 파셀리아, 메밀 등

라 토양 진단에 의한 시비 체계 확립

-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배합한 맞춤형 비료 사업 지속 추진
 - 토양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비료 공급으로 관행 시비법에 비해 15~20% 비료사용량 절감 추진
 - 맞춤형 비료 공급량을 매년 확대하여 '15년에는 복합비료 전체 사용량의 95% 수준으로 공급 유도
 - 맞춤형 비료 공급 비율 : ('10) 60% → ('11) 83% → ('15) 95%

-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맞춤형 비료 설계 및 비중 확대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맞춤형비료 31종 확정('10)
 - 간척지 및 황산가리 함유 발작물 전용 신규 맞춤형비종 설계
 - 간척지 지역의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 전용비료(2~3종)를 '12년부터 공급
 - 황산가리를 혼합한 발작물(과수 포함) 전용 맞춤형비료를 설계하여 '12년부터 공급 추진
 - '12년부터 완효성 맞춤형 비료 설계·공급으로 완효성 비료 가격 인하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유도
 - 완효성 비료 사용량 : ('09) 29천톤 → ('11) 35 → ('15) 70
 - * 완효성비료 : 요소에 특수수지를 피복하여 용출속도를 조절, 비료성분이 지속적으로 용출되어 작물 생육기간 동안 비효 공급 (연간 1회 공급)

- 농가신청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5천톤 이하), 기술적으로 다른 비종과 통합이 가능한 비종을 선택하여 통합 추진

□ 토양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친환경(유기)재배에 적합한 토양관리 표준모델 제시

- 유기질비료 및 녹비 연용 유기재배지 토양·양분변화 분석 연구
 - 녹비 및 유기질비료를 시비한 농경지를 성과측정 대상으로 한정, 정확한 시비효과 측정(성과지표 제고)
 - * 진흥청 토양관리정보시스템(흙토람)과 연계, 적용
- 녹비작물 투입 후 유기질 자재를 이용한 추비 공급 기술 연구
 - '녹비+가축분뇨액비' 활용에 의한 화학비료 완전대체 및 지력 보강 등
- 녹비작물 피복재배에 의한 경사지 발토양 유실경감기술 개발
 - 발토양 비옥도 개선, 국토보전, 하천수 수질 보전효과 평가

□ 한국형 정밀농업(Precise farming) 체계 구축

※ 정밀농업 : 작물의 생육상태나 위치별 토양조건에 따라 적합한 농자재 투입과 생육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농자재의 투입 최소화, 환경을 보호하고 수지(收支)를 최적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체제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농업정보 수집 및 통합 관리
 -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농가 및 농업환경정보 DB 구축
-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의 토양진단센터 등과 연계, 적지적작(適地適作)에 필요한 시비처방서 제공 및 컨설팅 수행
 - 토양·중금속·농업용수·액비 등 농자재 사용정보 제공

3.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확대

【 추진 방향 】

- ◇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녹색성장 구현
 - 자원화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퇴·액비 품질 향상, 자원화시설 지원·사후관리 체계 개선 등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자원화 촉진

- 녹색성장,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퇴액비·에너지) 시설 기반 구축
 - 공동자원화(누계) : ('10) 56개소 → ('13) 88 → ('15) 120
 - 에너지화시설(누계) : ('10) 3개소 → ('13) 12 → ('15) 20
- 액비저장조·유통센터 확대 지원 등을 통한 액비유통기반 구축
 - 액비유통센터(누계) : ('10) 128개소 → ('13) 178 → ('15) 200
 - 액비저장조(누계) : ('10) 6,524기 → ('13) 8,200 → ('15) 10,000
- 효율적인 액비저장조 관리 및 액비 유통 활성화 추진
 - 액비저장조 관리기준 개선
 - 액비저장조는 가급적 이동 및 재활용 등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
 - 액비저장조에 성분분석 결과를 상시 부착하여 수시 이용 유도

- 액비저장조 관리주체를 지역별 유통센터로 일원화하여 주도적으로 성분 분석, 시비처방서 관리, 농가 살포 유도
 - 축산농가로부터 액비 수거시 고액분리 등 관리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기준에 적합한 액비만 수거
- 액비살포비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된 액비의 유통 활성화 추진
 - 액비살포비 지원 : ('10) 55천ha → ('13) 60 → ('15) 65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홍보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등 관련 전문가로 인력풀 구성
 - * 대학,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 가축분뇨 처리기술 및 퇴·액비 이용관련 교과목을 축산관련 대학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농업기술센터의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 지도 및 홍보 기능 강화
 - 겨울철 영농기술 교육시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방법, 시비처방서 활용 방법 등 교육
 - 경종농가에 퇴·액비 이용방법 등 홍보자료 배포
 - 지자체의 적극적인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 선정하여 인센티브 자금 지원

나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이용 확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개정

-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액비부숙기간(6개월 → 4), 액비살포 의무면적(640m² → 300),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거리 제한 완화 추진
 - 액비살포 가능지역 확대 : 경지·초지 → 골프장·임야 추가

□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퇴·액비 품질개선 위주로 지원

- 액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를 도입하여 고품질 액비생산 유도
 -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허용하고, 액비살포비 지원('12년)
- 정부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제조업 등록 의무화('12), 액비유통센터는 분기별 액비 성분분석 결과 비치 의무화
 - 정부지원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비 2등급 이상 생산 조건부 지원
 - 생산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양질의 퇴·액비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 확대
- 지역별 퇴·액비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고품질 액비생산 유도('11)
 -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및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 등에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액비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인증서 발급 추진

□ 지역 농·축협의 퇴·액비 생산·공급체계를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순환농업 추진**

- 지역농협이 경종농가의 신청을 받아 살포시기 및 면적 확정
- 지역축협은 지역의 액비저장 실태를 파악하여 살포계획 수립
- 액비유통협의체는 퇴·액비를 사용한 경종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브랜드화 추진

□ 부숙이 덜된 불량액비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 악취발생, 미숙성 액비사용 등 불량액비에 대한 유통단속 강화
- 지자체별 환경분야 등 민간인 중심으로 명예감시원 구성·운영
- 악취 발생시 소비자 신고가 용이하도록 액비운반·살포차량에 대한 실명제, 표시간판 부착 운행

□ 경종농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악취·품질관리, 바이오가스 생산효율 제고 등 실용화기술 집중 개발

- 악취탈취제 개발, 악취제어 미생물 배양 등 기술 개발 및 보급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비용절감 기술 개발 및 보급
-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시설작물 액비이용 기술개발
- 가축분뇨 퇴·액비로 인한 토양내 축척되는 염류, 인(P), 중금속, 항생제 등 감축 관리기술 개발
-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 가축분뇨·농축부산물을 이용한 한국형 바이오가스 공정개발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보전

【 추진 방향 】

- ◇ 농자재 및 노력비의 투입 최소화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및 다원적 기능 제고

가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입산 유기 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판로 개척 및 시장 확대가 한계
 - 유기농업 농가의 실제 투입 수준은 적정 수준에 비해 과다
 - * 유기질 비료비 32%, 병해충 방제비 41%, 유기농자재비 41%, 노력비 40%(KREI)
- 저투입 친환경재배 매뉴얼 작성 후 농가 보급
 - 품목별·지역별 윤작체제 도입 등 적정 친환경(유기)농법 개발
 - 토양 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친환경(유기) 재배에 적합한 시비 처방 유도
- 농기계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농가 조직화, 농지 집단화·단지화
 - 친환경농업 실천 포장에 대한 공동관리로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 유도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 해소
- 농법별 표준 매뉴얼을 통한 공동관리로 저비용의 효율적인 영농 실현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작목반별·마을별로 구성, 공동작업 실시 유도
- 쌀의 경우,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으로 '15년까지 경영비 20% 절감

※ 운영 방법(안)

- 영농단계별(육묘, 파종, 병해충관리, 수확 등) 공동작업단 운영계획 수립
- 작물별 생육시기 등을 감안,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작업 실시
- 농기계 조작능력과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위주로 작업단 운영

□ 친환경농업 연구회 및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 개발 및 전파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연구회 운영 및 적정 기술체계 모색
 - 품종,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 등 현장 실용화 기술 중점 개발
 -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경영수준 등에 따른 품목별 비용 분석
- 적정 기술체계 보급 확산 및 현장 애로 기술 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중앙, 지방) 구성
 - 지방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수시 지도·상담 활동
 - 농수협, 품목단체,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 비용절감 농가를 발굴, 포상·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3년)함에 따라 친환경농가 확산에 기여

○ 최근 유기농자재의 가격 상승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등 실천 농가에 대한 경영 압박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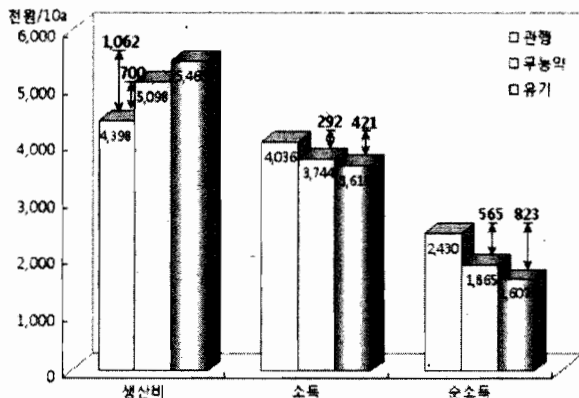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되어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 농가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필요

□ 친환경농업 직불제 내에서 무농약 인증 이상의 기반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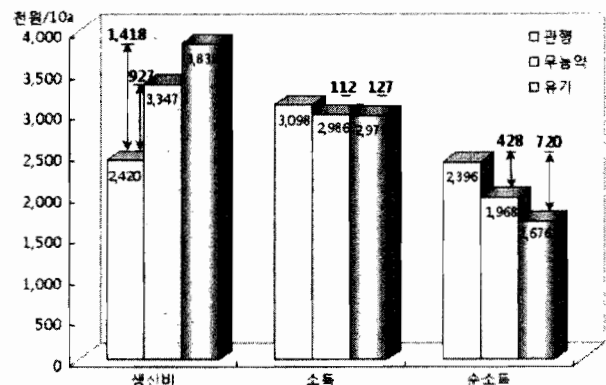
※ KREI 연구용역 제시안을 토대로 작성, 예산당국과 협의 예정임

○ 주요 품목의 유기농산물 생산비와 소득분석을 통해 지급 단가 상향 조정 추진

〈인증유형별 상추 생산비, 소득 및 순소득 비교〉



〈인증유형별 사과 생산비, 소득 및 순소득 비교〉



- (밭) 관행농업 대비 소득 감소액의 중간치에 해당하는 작목 (토마토, 사과 등) 기준으로 인상 상한선 설정

- (논) 쌀 고정직불금(10 : 597천원/ha)과 친환경직불금을 합친 지급단가를 밭의 지급단가 수준으로 설정
- 무농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급하고 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의 소득차가 없어지는 4년차에다 인센티브로 1년을 추가 지급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과의 소득 차이(KREI) >

(단위 : 천원/10a)

관행농업 대비 소득 격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 기 재 배	-211	-176	-126	-17	58
무농약 재배	-200	-159	-119	-22	31

□ 직불제 개편과 연계,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다원적 기능 제고

- 특히,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가의 이행조건 강화를 전제로 공익 고정직불제(가칭) 활용 검토

※ 현재 우리나라는 유기재배의 경우 3년간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농업생태계의 환경질 보전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5년차 이상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농가별 농업환경 준수 프로그램 등 메뉴방식 친환경직불금 도입 검토
 - 마을·들녘 단위로 지역 개념을 도입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 저탄소, 토양보전, 지력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친환경 관련 신규 직불제 도입 추진 검토

제2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정책 목표

- ◆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된 유통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 ◆ 소비자의 가치(가격, 건강, 영양, 안전 등)를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 소비 촉진 유도

주요 과제

- ①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
- ② 다양한 유통 주체의 육성
- ③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
- ④ 해외 마케팅 구축 지원

정책 지표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 ('10) 400억원 ⇒ ('15) 700
- ◆ 소비자유통활성화 자금 : ('10) 24억원 ⇒ ('15) 72
-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개소) : ('10) 3,200 ⇒ ('15) 5,000
- ◆ 생협의 고정 소비층(만명) : ('10) 50만명 ⇒ ('15) 100
- ◆ 학교급식 관련 현장체험(인원) : ('10) 1,000명 ⇒ ('15) 3,000
-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 ('10p) 3.7조 ⇒ ('15) 5조
- ◆ 친환경농산물 수출액 : ('10p) 200만불 ⇒ ('15) 5,000

1.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

【 추진 방향 】

- ◇ 조직화·규모화된 거점 조직을 육성, 산지 유통 활성화 추구
- ◇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가 산지 수집·출하 단계의 조직화·규모화

- 친환경 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생산자(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조직화를 기초로 산지유통시설의 가동을 제고
 - (친환경 지구)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친환경지구 사업을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의 첫 단계로 탈바꿈
 - * 기존 지원 외 유통 현황 등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원 검토
 - (광역단지) 광역단지 내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 광역단지 내 산지유통시설이 지역별·시기별·품목별 주산지 역할 수행 필요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을 산지의 거점 조직으로 육성
 -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참여 지역농협(약 153개, 전체 지역농협의 13%)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출하조직 육성 및 지도
 - 해당 지역농협에서 각종 자금지원 및 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업을 통해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친환경 전용 식당, 학교급식 등 다양한 판로 확대 등 추진
- 마을단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유도,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시설투자(친환경지구 선정, 가공시설 등), 기술보급 및 컨설팅, 홍보 행사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물류 효율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및 사업대상 범위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확대
 - ('10) 400억원 → ('13) 600억원 → ('15) 700억원
- 유통·식품·외식업체 등으로의 사업대상 범위 확대
 - * (기존) 생산자단체 → (개선) 생협, 전문유통업체, 식품업체 등 까지 확대

□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건립, 물류비용 절감 유도

- 경기도 광주의 친환경 전용 종합물류센터('09~'12)를 통해 물류비 절감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확보
 - 생협·농협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주체 등과 연계하는 최적 방안 모색
- 기 조성된 센터의 운영 성과 및 전국의 유통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가 건립 유도
- 기존의 산지 유통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추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검토
 - 기존 산지 조직(APC, 시군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물류센터 등)들과 생협 생산자회와 연계하는 방안 추진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처리 시설 일부 지원 등 방안 검토

2. 다양한 유통 주체의 육성

【 추진 방향 】

- ◇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소비지 유통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 확대
-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산 등 新 시장 창출을 통해 유통 활성화 도모

가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소비지 매장에 대한 지원 확대

□ 한살림·생협 등 생산자·소비자 연계 조직의 적극 육성

- 소비자 교육, 현장체험 및 홍보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고정 소비층(충성 회원) 확대
 - * ('10) 50만명 → ('12) 70만명 → ('15) 100만명
 - 폭넓은 조합원 참여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식품 개발·개선 활동 지원
 - 소비자 회원(충성 회원)들의 부정 인증·유통 민간자율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활동 지원
- 구매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포장단위 및 가공식품 개발 관련 산·학·연·관 파트너쉽 체제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농협과 생협의 협동조합 간 상생 방안 추진

* (농협) 친환경유기농업의 생산기반 확충 + (생협)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자를 조직화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농협+생협 포함)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 확대 방안 모색

-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 지역농협을 충성스러운 출하자로 육성, 생협의 소비자조합원과 연계
- 생협의 소비자 교육·홍보활동 경험과 농협의 도농교류(1사1촌) 활동 경험을 활용, 소비자 교육사업 추진

□ 대도시 인근의 소비지 중심 직거래 채널 확대

- 소비지유통활성화* 자금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개설 확대
 - 사업 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 확대, 규모화 및 전문화 유도
- * (기존) 생산자 단체 → (개선) 친환경농산물 취급 유통·식품·외식업체 포함

□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정보 체계 구축, B2C거래 지원 확대
 -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으로 대상 확대
- 카탈로그 쇼핑,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검토(스마트폰 등)

나 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협 유통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및 도매기능 확대

- 농협 경우 친환경농산물 출하액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수준
 - 2015년까지 약 10% 수준까지 상향 조정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 '아침마루관' 설치 확대

- i)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내 '아침마루관' 설치 확대
 - ('09) 218개소 → ('10) 260개소 → ('12) 350개소 → ('15) 500개소
- ii) 백화점 및 할인점 내 솜인숍(shop in shop) 입점 확대
 - ('10) 10개소 → ('12) 20개소 → ('15) 50개소
- iii) 인터넷 쇼핑몰 신규 개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매출 증대 ('10: 13개소)

○ 농협 유통센터의 수집·분산 기능을 적극 살려 대형유통업체, 친환경 전문업체, 외식업체 등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와 외부단체급식 개척

- 농협중앙회 내 「친환경급식사업단」 발족, 전국단위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외 외부단체급식 등에 대한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 1사 1촌 협약 체결 대기업 중심(구내식당 운영 본사 중심)으로 급식 추진 유도

다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채널 확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장 적극 발굴

- 학교장, 학부모,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유기농 현장 체험 및 직무교육 확대 실시
- 「친환경급식 및 녹색 식생활 교육」 연구학교 운영
 - 친환경 급식 및 녹색식생활의 교육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 * 「식생활 교육 국민네트워크」와 연계, 학계·교육계·소비자·의료·언론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농협의 종합유통센터 및 기존의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활용, 지역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기존 시설 이용의 당위성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가동을 제고
 - 학교급식 일수 제한(180일)에 별도 시설 이용시 이용을 저하
- 기존 인력 및 장비 등 최대 활용으로 비용 절감

- 기존 유통시설에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 급식센터로 활용
 - 전국적으로 11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중으로, '15년까지 40개소로 확대 추진
 - * 농협 참여(순천, 나주, 청원, 목포, 영암, 영주, 장성) 및 민간 영농법인(서울강서, 양평지방공사, 문경영강영농조합, 김해친환경영농법인)
-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모색

※ 아이쿱생협 친환경급식(주) 사례

- i) 100% 계약재배(저렴한 가격 제공), 7개의 물류센터와 배송센터 운영
- ii) 자체안전시스템 및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을 홈페이지 공개
- iii)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잔류농약 검사(출하 2주전, 입고 후)

- 학교급식업체 등 취약유통업체의 집중 관리를 통한 부정유통 사전 예방 추진
- 식재료의 출하 전 유해 잔류물질 검사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지역생산-지역소비(로컬푸드) 체계 추진

□ 지역의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과 공동 협력방안 강구

- (체계) 農(농)·食(식)·環境(환경)·生活(생활)을 테마로 한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화 유도
 - *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 선도업체(생산, 유통, 가공 등),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
 -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 초기 신속한 정착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
 - 현장에서 주도할 지역단위 「핵심 그룹(Core Group)」 구성
 - * 권역별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으로 '민간 거버넌스' 구성, 지역사회에서의 운동 촉진 유도
- (추진 내용) 범국가적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추진기반 확충

< 주요 내용(예시) >

- ① 소비촉진 캠페인, 우수성 홍보물 제작·보급 등 홍보 활동 강화
- ② 친환경농산물 사용 우수식당 및 전문 업체 지정 확대 및 홍보
- ③ 로컬푸드 및 푸드마일리지 운동 전개를 통해 지역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 저탄소형 식품 소비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④ 소비자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 제공(식생활 자료 등)

□ 지역명물 '그린파머스마켓(가칭)' 상설화 추진

- (장소) 7대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의 시민광장이나 인구밀집 지역에서 지역특산물·관광지와 연계하여 포지셔닝 모델화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로컬 푸드 개념의 직거래 장터 확충
 - (운영내용) 친환경농산물 판매, 인증표시 확인, 시료검사를 통한 안전성 홍보, 문화공연, 녹색식생활 홍보자료 배포 등
 - (기타) 소비지 중심의 다양한 직거래 행사 적극 지원
 - 생산자 단체 주관 판촉행사 지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특판 행사 등
- **친환경유기농산물 패키지(꾸러미) 생산-공급 사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후원농업(CSA*) 운동 추진**
-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계하는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산비용을 지원
 - * (사례) 팔당-등대생협 채소꾸러미, 서천군 지역먹거리생산조합, 괴산 흙살림 등
- **친환경농산물과 탄소표시제의 연계, 소비자의 저탄소 소비 유도**
- 원료 원거리 수송에 따른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로컬푸드 선호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원단위 탄소배출량 DB 구축 및 탄소표시 시범인증 사업 실시
 - 품목별 탄소배출량 평가지침 개발 및 각 단계별 통계자료 조사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탄소표시제 시행 기준 마련, 시범 인증 사업 실시

3.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

【 추진 방향 】

- ◇ 친환경농산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 촉진 유도
 - 식생활교육(食育) 및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 확대
 - 안전성, 우수성 등의 집중 홍보로 유통 활성화 도모
- ◇ 친환경농산물의 전문적인 통계조사 체계 및 자료 구축을 통해 신뢰 있는 정보 제공

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유기농생태마을·생태학습공원 등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정기적 행사 추진, 소비 촉진 유도
 - 「농·소·정 협력체계」 구축, 신규 대량 수요처 발굴 유도
 - i) 생산자: 친환경을 생산하는 법인체로서 체험 공간 제공(名人제 활용)
 - ii)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및 생협·한살림 등의 고정 고객, 학교·병원 등의 신규 참여 담당자 등
 - iii) 정부: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홍보 포함)
 - 학교와 자매결연 마을간의 긴밀한 협조체제(MOU) 구축, 어린이 대상 교육 강화 및 학교급식 유도
 - * 사례 : 서울 천동초등학교와 강원도 물안마을과의 MOU 체결
 - 물안마을 생산 유기농 채소류 사용, 유통비 절감 등 효과

마을→학교	학교→마을
○ 농촌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학교 텃밭조성	○ 농산물 판매장터 제공
○ 친환경 식재료 공급	○ 친환경 식재료 구매

- 향후, 병원·대기업 등의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확대 추진

□ 친환경농산물과 도시농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 상생 발전 도모
-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옥상농원, 스쿨 팜(School Farm) 등 조성
 - 어린이(유아, 초등학생) 대상, 「친환경농장·그린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이해와 체험 기회 확대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 강화

-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 활성화 교육 실시**
 - 친환경농업의 당위성, 자연생태계 복원효과, 안전식품 등 교육
 - 친환경농식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초·중·고, 일반인 대상)
- 소비자단체, 학부모, 은퇴교사,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및 농식품 인식 확대
 - * (예시) '학부모 및 은퇴교사' → 초·중·고 학교대상 교육, '소비자단체' → 주부 대상, '유통업체' → 관련 전문 유통업체 대상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TV·라디오, 전문잡지(온라인 포함)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우수성 홍보

-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이벤트 확대 개편
 - 환경농업단체 및 민간 유통단체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유기농 (6.2일) 데이 행사를 전국적인 홍보 행사로 확대
 - 친환경농업 우수 지자체, 농업인, 농식품 등을 선발 시상하는 '친환경농업대상'과 홍보 행사를 연계, 상승 효과 제고
- 친환경(유기)농산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등 행사 지원
 - 국내 유기농식품의 세계화 및 산업화 토대 마련을 위한 「유기농 박람회」의 확대 개편 및 세계 행사에 한국관 설치 검토
 - * 한국 국제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Korea)로의 확대 검토
- 대도시 중심 직거래 판촉행사 등의 개최
 - 대형유통업체 및 중형마트 등과의 업무협약 확대, 신규 판촉행사 적극 발굴 (정례화 추진)

나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 및 주요 통계 정보 강화

- 유기농식품에 관한 국내외 수급 현황, 인증, 시장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유기농식품 종합정보 DB 구축 ('11~'12)
- 민간인증기관의 역할을 강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
 - 포털사이트 구축('11년 하반기), 업계·소비자 등에 제공
 - 유기농식품 분야 연간 업무 백서(연감) 추진

< 주요 내용(예시) >

- ① 인증기관 등록, 인증, 수입증명서 관리에 관한 업무
- ②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 ③ 유기농식품 사업자 목록 및 생산·유통 관련정보 제공
- ④ 소비자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 제공(식생활 자료 등)

○ 유기농 관련 '산업 MAP' 기초 조사 실시

- 지자체별(권역별) '名品 유기농 단지(농가) 및 가공업체' D/B 구축, 소비자 및 정책 담당자의 현장 체험 및 기술 컨설팅 연계

□ 유기농식품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체계 개선

○ 유기농식품 동향 및 국내외 기술현황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시행기간동안 1년 주기로 유기농산업 동향을 조사 분석
-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 및 기술수요 도출 연구

○ (생산자 및 유통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체계 및 자료 구축

- (주요 내용) 유통경로별 유통실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실태, 품목별 유통실태, 주요 생산자조직의 유통실태 등

○ (소비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격정보 및 매장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이용을 촉진

- 스마트폰 등을 통한 앱서비스 실시로 최저가 매장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개선 검토

4. 해외 마케팅 구축 지원

【 추진 방향 】

◇ 'Korean Organic'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구축

-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수출대상국의 식품 규격에 맞는 해외유기농 규격 인증 지원 등

□ 유기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 해외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바이어 상담, 시장조사, 현지 주요업체 방문 등 판촉활동 지원
 - * 대규모 바이어초청, Foodex JAPAN, SIAL CHINA 등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 및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 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Korean Organic'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해외 집중 홍보
- 해외바이어 초청 유기농 재배환경 체험 행사 추진

※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11.9.26~10.5)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 유도

□ 수출대상국의 식품규격에 맞는 해외유기농 인증 획득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

- 국내 유기 인증을 받은 품목 중 인증 가능성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지방정부, 인증기관, 생산자 및 기업이 협력, 선도 모델 달성

제3장.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친환경 인증 기준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강화

주요 과제

- 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관리 강화
- ②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정비
- ③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정책 지표

-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 조사 : ('10) 40천개소 ⇒ ('15) 45
- ◆ 친환경농산물 시판품 조사 : ('10) 12천개소 ⇒ ('15) 17
-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천건) : ('10) 64 ⇒ ('15) 75
- ◆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개소) : ('10) 10 ⇒ ('15) 30
- ◆ GAP농산물 면적 비율 : ('10) 2.7% ⇒ ('15) 7.0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 추진 방향 】

- ◇ 민간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 유도
- ◇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의 인증품의 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인증업무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등을 위반할 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 매년(상·하반기) 인증기관의 업무이행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시 제재 등 처벌강화
 -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증기관별 인증품 신뢰도 제고
 - * 점검 결과는 정부의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 거양
- 민간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기관화 유도
 -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관은 지정배제
 - 인증업무계획, 재정상황 등 강화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강화 등
 -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적인 구조를 강화하여 신뢰성 확보
 - 인증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별도 법인화 유도

○ 민간인증 기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가이드 65” 준용

* ISO가이드 65 : 인증기관의 조직, 품질경영, 심사원관리, 인증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인증 기관 공개 추진

- 지역별로 규모화된 민간 인증기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전문성 유도(사업비 차등지원 등)

□ **인증심사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증명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 인증심사원의 정기적인 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해당자격, 교육수료, 공적 및 징계 등의 전산시스템 관리

○ 매년 우수 인증심사원을 「인증명장」 으로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인증기관 평가에 가점 부여, 심사원 교육교관으로 활용 등

□ **인증기관별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고, 업무량 등에 따른 적정 심사원 확보 유도**

○ 인증기관 유형에 맞는 인증수수료 체계 마련(필요시 상한액 고시)

- 인증기관이 스스로 수수료를 정하여 공개하고,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증종류(농·축산물) 및 인증품목(수도작 등) 등 인증업무 량에 맞는 적정 심사원 확보 권고 등

□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고, 인증업무 신뢰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정부(품관원)와 민간으로 이원화된 인증업무를 '1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양하여 13년까지 완전이양
- 인증위원 선임, 인증행정·심사절차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 공개 등

나 생산유통 단계의 인증 관리 강화

□ **인증심사 과정 등에서 필요한 심사매뉴얼 보급**

- 인증심사시 표준화된 업무절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심사매뉴얼 보급
 - 인증단계별 체크리스트,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유형 등 제시
- 인증심사 과정에서 CCP 활용 등 국제적 심사기법 도입
 - 인증기관별 상이한 심사기법을 통합하여 내실 있는 심사
 - * CCP(Critical Control Point) 심사매뉴얼 :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항목 및 취약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심사 기법

□ **인증받은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 규모화된 생산자단체의 자체 품질관리 모델 개발, 보급
 - 표준생산지침서(쌀), 생산행정 관리자 지정·운영 등
-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홍보 강화
 - 생산지 선정, 거래물량 확인, 이상품 리콜, 소비자 참여행사 등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 생산자의 출하기록이나 라벨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품목별 취약시기에 농장을 중점 관리하여 신뢰성 확보
 - 라벨은 인증받은 자만이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등
-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과정 관리강화
-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재포장업체, 인터넷판매업체 등의 전산화를 통한 집중관리
 - 재포장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인증제 추진

□ 수입 유기농산물 검역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관리강화

- 주요 수입국가 생산농장 등에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강화
- 검역과정에 대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정유통 차단 등
 - 식검원과 품관원의 검역과정에 대한 정보공유제 운영
-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내 유통경로 확인 등 점검강화(수시)

□ 인증품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거래인증서 사본(Transaction certificate)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력추적제 확대

- 인증기관이 각 생산, 운송, 보관, 유통과정에서 인증서 사본을 발행토록 추진, 인증품의 부정유통 차단
 - * EU사례) 유기농 인증품의 경우 유통과정(생산자→도매상→소매상)에서 반드시 인증서 사본이 첨부토록 관리
- 인증품의 생산 활동과 유통 및 최종 소비단계의 이력추적 시스템 체제 도입

2.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정비

【 추진 방향 】

◇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및 인증대상의 범위 확대

- 인증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국제적 조화 추진
- 유기농식품 및 관련산업의 연계발전 기반 마련 등

□ 국내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운영, 국제적 조화 추진

-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마련
 - *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식품산업진흥법) 이원화
- 유기농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을 국제기준(IFOAM, CODEX)에 맞게 신규 설정
 - 유기농식품 등의 기본원칙과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목록을 종류별로 구체화하여 규정
- 동등성 인정 추진 등 유기농식품 인증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모색

□ 유기농 관련 인증대상 범위 확대

- 유기농산물 外 어업(수산물),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까지 포함하여 통합 관리 추진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추진
-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산물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을 구체화

※ 화장품·섬유·유아용품 등 유기농 관련 산업의 성장, 신성장동력 확보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품목별 유기 인증 기준 설정 및 홍보 추진

3.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 추진 방향 】

-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적격 농산물 시장유입 사전 차단
 -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및 분석 인프라 구축
- ◇ GAP 농산물과 이력추적 농산물 비중을 '15년까지 7%로 확대

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 안전관리 영역 확대 및 조사체계 개선

-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 과정 일괄 관리하고, 안전성 조사를 농산물 이외에 농경지·농업용수·농업용 자재까지 확대
- 조사물량 확대 : ('09) 57천건 → ('10) 64 → ('15) 75
- 관련기관간 안전성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안전성 홈페이지(www.safeQ.go.kr)를 이용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 정보 제공

□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국가잔류조사 체계 도입·구축

- 안전성 수준 진단, 정책수행 효과 평가, 관리 방향 설정 등에 활용
 - 조사 물량 확대 : ('10) 14천건 → ('15) 18

※ 국가잔류조사 : 농산물의 개별 품목 및 전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파악(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조사 (과학적 근거 및 생산량 비중 등을 고려한 표본추출을 기초로 하며, 부적합 농산물의 적발 및 규제 목적의 안전성 조사와는 차별됨)

□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수출 농산물 검사 지원

- 시설·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분석 등 위탁
 - 검사기관 확대 : ('10) 10 기관 → ('15) 30
- 국가별 안전기준에 맞춘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수출 사전 차단
- 증가하는 신규 농약성분 분석과 수출 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을 위해 첨단 분석장비(LC/MS/MS) 확보 및 분석의 신속화 추진

□ 안전성 조사 인프라 확충 및 분석의 신뢰 제고

- HPLC/MS/MS, GC/MS/MS 등 극미량 분석장비 지속 확보
- 안전성조사 분석기법 연구개발 보급 확대
 - 농약 동시 분석 가능 성분수 : ('09) 184성분 → ('10) 153 → ('15) 170
- 전문 분석인력을 연구직으로 전환하거나, 특채 확보를 통한 분석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등 분석기능 활성화
 - 분석 인력 확보 : ('09) 148명 → ('10) 153 → ('15) 170

나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 실시 확대

- 2015년까지 인증기관 확대, 인증심사원 양성, 분석비용지원, 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지 면적의 7% 이상 GAP인증 추진
- 전체 농산물의 GAP인증 면적 비율 증가
 - ('06) 0.3% → ('08) 21 → ('10) 27 → ('13) 5.0 → ('15) 7.0

□ **GAP관리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 이력추적 관리 및 위생설비 확충 등을 위한 GAP관리시설 증가
 - ('06) 190개소 → ('08) 417 → ('10) 542 → ('13) 830 → ('15) 1,000

□ **향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비 관련제도와 법령 정비 추진**

- GAP인증 유효기간(1년)을 저농약과 같이 2년으로 조정
- 친환경인증의 재포장취급자 인증제도를 GAP제도에도 도입
- GAP인증시 농업인의 사전 의무교육 기관(현행 농진청 기술센터)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실용화재단 등으로 다양화
- GAP인증심사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심사인력 활용 극대화
- GAP관리시설 지정기준을 보완하여 소규모 자가 시설 이용 활성화
 - 자가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지정절차 없이 인증심사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GAP 농가·시설 등의 컨설팅 포함, 저농약 농가의 GAP 전환에 관한 홍보 및 컨설팅 강화

□ **농업인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 확대와 전산정보 관리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모**

-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유통정보의 전산화를 강화
 - 이력관리 전산화 농업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추진
- 농산물이력등록 농가수 증대
 - ('06) 8.8천호 → ('08) 48.2 → ('10) 87.1 → ('13) 147 → ('15) 186

제4장.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전후방 연관산업]

정책 목표

- ◆ 가공 및 농자재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친환경 녹색산업의 구현을 통해 민간 투자대상의 저변 확충

주요 과제

- ①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②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
- ③ 친환경 녹색 기술 및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지표

- ◆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지원 업체(개소) : ('10) 신규 ⇒ ('15) 100
- ◆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개소) : ('10) 신규 ⇒ ('15) 3
- ◆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목) : ('10) 1,070 ⇒ ('15) 2,750
- ◆ 유기농자재 수출액 : ('10p) 500만불 ⇒ ('15) 5,000
- ◆ 친환경농식품 녹색인증업체(개소) : ('10) 신규 ⇒ ('15) 30

1.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추진 방향 】

- ◇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친환경농산물의 新 부가가치 제고
 - 친환경(유기농) 가공식품의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관의 파트너십 체제 구축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 다양화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가공시설 지원 등

가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산·학·연·관 협력체제 지원 시스템 구축

- 산·학·연·관 주체간 이해 조정 및 협력 증대 인력 및 조직 운영
 - * 수요자 니즈 조사 → 협력사업 및 참여 주체 연계 → 수요기업과 산·학·연·관 주체간 공동 사업설계 → 협력·분담 추진 → 평가
- “유기가공 산·학·연·관 협력망” 구축·운영
- 기술 및 전략 관련 전문가 Pool 확보 및 자문단 구성
- 민간 조직, 대학, 연구소 등 기관별 유기농식품 관련 특화된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연계 운영 촉진

□ 산·학·연·관 기반 유기가공업체 지원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가공업체의 발전단계별·시기별 지원 방안 마련 및 대상 선정

- i) 영세규모 유기사업 영위 업체: 기술 및 제품 보완(1차 단계)
- ii) 기술력과 자본규모가 비교적 높은 업체: 신제품 개발(2차 단계)
- iii) 대규모형 유기산업 업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3차 단계)

- 산학협력에 의해 개발된 기술 또는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추가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상용화 등 자금 지원
 - 기술도입, 제품개발, 시설투자 등에 따른 시장성 분석 등
 -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술 발굴, 사업화아이템, 보육 등
 - 온라인 특허상담, 종자증식, 시장분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 참여 산·학·연·관 주체별 주요 역할>

- ◇ (중개기관) 프로젝트 사업 추진·운영, 전략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 (産) 제품 개발방안 및 기술제안, 시제품 생산 및 판매, 시장정보 제공
- ◇ (學, 研) 발전방안 연구 및 교육, 제품개발, 마케팅전략 수립
- ◇ (官) 제도·행정 지원, 시설·설비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나 가공산업 활성화

□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 원료 구매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HACCP 등 시설현대화 등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방안과 연계, '친환경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및 위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15년까지 명품업체 100개소 육성)
 - 단순 가공에 그치는 영세한 유기가공업체의 생산을 위한 별도 라인, 기계, 위생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융자 지원
 - 초기 정착단계 소요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융자지원하되, 민간의 식품안전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자부담 부과
-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계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 간 공동 추진과제 발굴 확대
 -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중소기업청' 간 업무 협약 체결('10.7) → 생산과 연계된 가공 중소기업체들의 발전 토대 마련

□ **생산기반과 상품화-가공-마케팅을 결합하는 '유기농식품 클러스터(가칭)' 조성**

- (추진방식) 생산자-소비자 연대 및 전문 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방식 도입 검토** (입주업체 출자 및 펀드 등을 활용)
- (생산기반) 지자체와 협의 또는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 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
 - 향후 추진 예정인 「유기농 특구」 및 「유기농 생태마을」 등과도 연계
- (관련 정책과의 연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및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등과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에코 농식품 산업 단지로 조성**, 「유기농 융복합 클러스터」 체계 구축

2.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

[추진 방향]

◇ 곤충 및 미생물 등의 생명자원 육성을 통해 유기농자재 산업의 新 수요 창출

- 천적 시장의 규모 확대 : ('09) 416억원 → ('15) 2,000
- 미생물제제산업 국내시장 규모 확대 : ('09) 960억원 → ('15) 4,800

◇ 저탄소 유기농자재산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 증가로 화학비료 및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기술 소재로 곤충 및 미생물 산업이 부각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2), 곤충자원의 산업화 지원 및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 토대 마련

- 또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천연자재 제조기술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곤충 및 미생물 등의 생명자원 산업화를 통해 유기농식품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

- 생명자원의 “보존-확보→가공·정보화→연구개발→상업화”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농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 국제경쟁력 있는 고효율 유기농자재 개발을 위한 R&D 강화
- IT·BT·NT 등 타 분야와의 기술융합으로 고효율 농자재 개발
- R&D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곤충 및 미생물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화

- 미생물농약, 미생물비료, 미생물 영양제, 환경 개선제 등 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제 개발사업 추진
- 천적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는 환경문제 등으로 유독성 농약에 대한 대체제로 그 수요가 증가

< 유기농자재 중점 추진분야(예시) >

- ①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토종천적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
 - ② 식물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 선발 및 실용화 연구
 - ③ 토양양분 유효화, 토양병 발생억제, 생장촉진 등 다기능 미생물 비료 개발 및 이용 연구
- ⇒ 2015년까지 각 과제별 50개 이상 제품 개발·등록, 연 매출액 50억 이상의 제품 2개 이상 개발 목표

□ 저탄소 유기농자재산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 효능이 적은 제품의 시장 퇴출 유도
 - 유통중인 농자재에 대한 검증 강화로 불량자재 유통 사전 차단
- 산·학·연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유기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 경영자금 지원(융자) 및 우수업체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저탄소 유기농자재 산업 집중 육성 검토
 - 인증을 통과한 우수 자재의 육성 차원에서 일방적인 보조 방식 보다는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펀드업계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정책적 연계 방안 마련

- 천연자재 제조사례(우수사례 발굴), 전통농법 등 수집 및 보급
- 올바른 유기농자재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유기농자재 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 모색

- 농식품 수출육성정책에 유기농자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해외 전시회 참가 등
-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유기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체계도(안)>

① 정부 및 지자체

- 유기농자재 공급 지원 및 생산업체 관리
- 지역소재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소규모 IR 실시
- 유기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R&D 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② 진흥청(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학계 등

- 유기농자재 검증 및 표준사용 매뉴얼 제작·보급
- 천연물질 활용 생물농약 등 개발
- 천연자재 자가제조 기술 보급(우수사례 전파)

③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및 유기농자재관련 연구센터

- 천적 및 미생물제제 등 생물학적 방제 기술 개발
- 시범포 운영 및 실용화 방안 연구(농법과 연계 표준모델 개발 등)

④ 유기농자재 생산업체

- 제품 상용화 판매 / 자재사용 및 재배기술 지도 등
- 친환경농자재 전시 및 홍보

3. 친환경 녹색 기술 및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추진 방향 】

◇ 친환경(유기)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농식품 모태펀드 및 녹색인증 제도와 연계, 추진
- 유망한 녹색 비즈니스 업체 발굴, 소규모 IR(투자설명회) 개최 등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 유기농 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 *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농식품투자조합, VC, PEF 등)를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자금을 출자하는 방식

< 주요 투자 분야(예시) >

- ①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등 대규모 단지 조성
- ② 유기가공업체 및 전문 유통·식품업체 등 녹색중소기업체 지원
- ③ 생물(곤충, 미생물 등)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기술 및 업체 지원

- 우수한 친환경농식품 경영체와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활동 강화

- * '농식품 투자로드쇼' 등과 연계, 소규모 간담회 및 우수 기업 IR 실시 추진

□ 녹색인증 제도*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 * 구체적인 녹색 투자대상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에서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10대 분야 중 친환경농식품 선정)

- 세제혜택이 부여된 민간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인증된 녹색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선 투자 지원
- 아울러 친환경농식품 관련 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해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 추진

제5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목표

- ◆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 녹색산업의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주요 과제

- ① 친환경(유기) 기술개발 및 보급체제 구축
- 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지표

- ◆ 품목별 유기농 기술체제 구축
 - 작물 : ('10) 6작목 ⇒ ('15) 15, 축종 : ('10) 0 ⇒ ('15) 6
- ◆ 전문기술 보급 사업단(개소) : ('10) 신규 ⇒ ('15) 9개소
- ◆ 작목단위 모델 농가(개소) : ('10) 신규 ⇒ ('15) 100개소
- ◆ 유기가공식품 기술 산업화(건수) : ('10) 신규 ⇒ ('15) 20건
- ◆ 친환경농업 교육 지원(대상) : ('10) 2,000명 ⇒ ('15) 4,000

1. 친환경(유기)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 ◇ 품목별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 식품 가공기술, 인증, 소비자 홍보기술을 포괄하는 종합 친환경농식품 산업 지원
 - 일반농업 대비 생산성 감소, 고투입·고비용 구조 등 개선
- ◇ 농업인을 포함한 기술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보급 및 확산체계 마련

가 품목별 유기농(친환경) 기술체계 구축

- 국내 주요작물(식량, 과수, 특용 등) 및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 기술 개발 지원 확대(농촌진흥청)
 - * 작물 : ('10) 6작목 → ('15) 15작목, 축종 : ('10) 0축종 → ('15) 6축종
 - (식량작물) 유기농 수요가 큰 콩·감자·고구마 등의 병해충 관리 및 작부체계 연구 추진
 - (과수)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저항성 품종,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등) 마련
 - (특용) 인삼·약초 등 고부가 유기농작물 생산기술 개발
 - (축산) 유기축산 기반 확보 및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국내 주요 축종에 대한 유기사양기술 개발
- 작물·병해충·잡초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유기농업적 종합 관리기술 개발 지원 확대

- 농자재 중심보다는 환경관리·재배방식 변경·식물체간 상호 작용 등을 이용한 병해충 관리방식 연구에 중점

□ 유기농업의 공익성 및 환경보전기능 연구 개발 확대

- 유기농(친환경)의 환경영향평가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기능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타당성 확보

< 3개 분야별 중점 추진 분야(예시) >

3대 정책목표	세부 기술
유기 생산기술 개발	○ 과수 저농약 인증의 유기농 대체기술 개발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 유기가축 생산을 위한 축종별 표준사양지침서 제작
	○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부산물 이용 및 논·밭 작부체계 개발
병해충·잡초의 생태학적 종합관리기술 개발	○ 천적, 기주식물 제어 등 생물학적 방법 연구
	○ 녹비·퇴비 등 유기물 및 윤작에 의한 토양 병해충 제어 연구
	○ 물리적·생태학적 방법에 의한 유기농잡초제어 방법 개발(녹비 피복효과 등)
유기농업의 공익성 및 환경보전기능 연구	○ 윤작·녹비작물 등에 의한 양분순환관리 및 토양 환경개선 (무경운 방법 등에 대한 연구 포함)
	○ 수질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온난화가스저감을 위한 유기농경지 활용방안 강구

□ 유기농 적합품종 선발 및 육성

- 국내 시판 품종 중 내병·내충성이 강하고, 양분이용률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
- 유기품종 육성을 위한 농진청, 국립종자원, 토종연구회, 개인육종가, 선도농가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사례 : 재래종 오이를 유기재배하여 소비자에 큰 호응(네덜란드)

나 고부가 유기가공식품 개발

□ 유기농축산물 수확후 처리 및 안전성 연구

* 미국 등 선진국은 유기농산물에서의 위해요인 제거 연구가 활발하지만, 국내 유기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유기농산물 전 과정 품질관리 기술

- 유기농축산물의 세척, 저장, 운송, 오염방지 등 기술개발
- 미생물 오염문제 등 유기농산물 위해요인 사전제거기술 개발
- 수출주도형 유기농산물 수확 후 관리프로그램 구축
- 유기농 관리기준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실용화

○ 유기농산물의 수확후 관리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 및 실용화 (생산 전 과정 안전관리 기술 종합 실증)

○ 유기농축산물 수확후 처리 및 안전성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 가공기술 및 품질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고부가 유기가공 식품 개발 확대

< 유기가공식품 R&D 중점 지원분야(예시) >

- ① 유기가공식품 생산용 천연 첨가물/가공보조제 개발 및 보급
- ② 유기가공식품 생산 공정 요소기술개발 및 실용화
- ③ 한식세계화 지원 유기농 고부가 식자재 개발(김치, 양념, 장류, 한과류, 미숫가루 등) 및 기능성 향상(품질 포함) 연구
- ④ 기능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 영유아식, 환자식사 대응식, 전통발효식, 체질개선식 등

○ 기존 기술 및 제품 보완 및 다양화를 위해 R&D 기술 및 제품 생산지원

* 예) 유기농 전두유 제품에 기능성 물질(홍삼, 들깨잎에서 추출한 오메가3 등) 혼입 기술을 통한 제품 강화 및 다양화 지원

- 가공기술 활용 및 가공설비 인증 컨설팅, 기술역량 제고 위한 산학협력 지원(연구장비·인력지원 등)

□ 수입한 식품 원료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유기식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고급시장을 공략

* 국내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의 약 72% 차지

○ 해외농업개발 등과 연계, 국내 식품업계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식품 R&D의 지원체계를 대학·연구기관(출연연) 중심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산업계에 중점 지원, 부가가치 창출 유도

-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소재를 선정, 연구 지원 집중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

다 유기농(친환경) 기술보급 지원체계 구축

□ 2015년까지 도별로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 사업단」 설치

* 현재 유기농 분야(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구가 부재, 확산에 애로

○ (추진체계) 기존의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전남대, 강원대) 등을 활용,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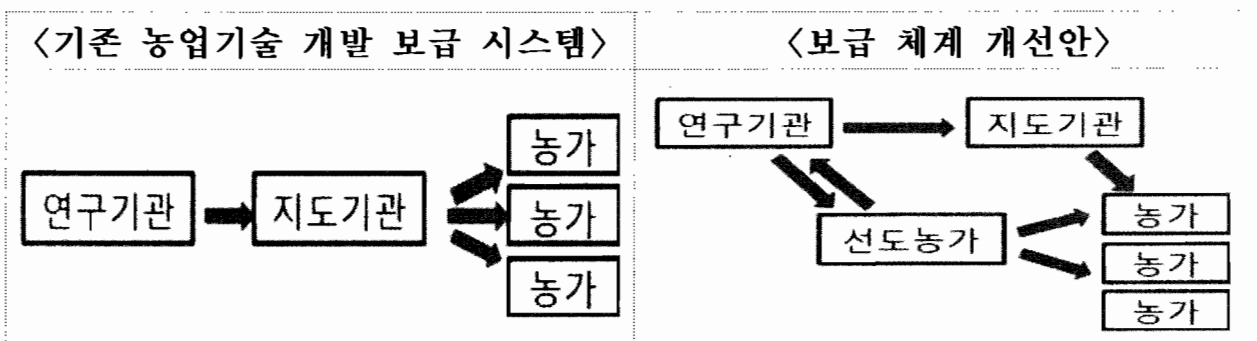
-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통해 도별로 확대('13~)

- (인력 지원) 「유기농 전문영농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추진
 - * 권역별로 각 작목별 전문가를 5~10명 정도 고용, 기술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 (사업 내용) 농법 및 농자재 선택, 품목별 재배기술 집중 지도, 유기농업 표준모델 보급, 가공 및 유통 관련 컨설팅 등

※ 독일 유기농 영농 보급체계 (Kompetenzzentrum Oekolandbau Niedersachsen)

- i) 설치 : 니더작센주('02.1월 최초 개소), 이후 각 주에 영농기술센터 설립, 운영
- ii) 임무 : 유기농 전환을 위한 영농기술지도 패키지 제공, 각 작목별·축종별 기술지도 및 유통·가공분야 상담 업무(외부 프로젝트 업무 또한 수행)
- iii) 직원 : 15명 내외의 유기농 전문영농지도사 배치(각 분야별 전담직원 배치)
- iv) 지원 : 정부가 1/2 부담, 컨설팅 수혜자인 농민이 1/2 부담

□ 산·학·연 및 농업인 연계 유기농 실용화 네트워크 구축, 유기농 기술 개발 보급 체계 개선



- 유기농 기술평가 및 확산을 위한 선도농가(작목단위 모델농가, 100개) 체계 구축
 - 농가 모니터링, 경영평가, 공동연구 및 유기농기술 평가
 - * 독일 사례 : 217개의 선도농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농가와 공동연구 수행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

- ◇ 교육 대상을 친환경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확대,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추진

□ 교육 대상을 유기농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확대,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생산자) 저농약·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바우처 교육(1박 2일)을 유기농 심화 교육 과정으로 개편(7~10일)
- (관련 업계) '유기농식품 유통·판매 취급자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기농식품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기존의 친환경농업교육 기관을 활용, 분야별 강좌 개설 추진

< 유기농 전문인력 양성 과정(예시) >

- ◇ (1단계) 유기농 최고 전문가(15주)과정 개설(생산자/소비자반)
- ◇ (2단계) 유기농 귀농학교(6개월) 과정 개설
- ◇ (3단계) 유기농 마이스터 학교(1년) 과정 개설, 유기농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제과·제빵학과, 유가공·육가공, 발효식품 등)
- ◇ (4단계) 유기농 특성화 대학(대학원) 전문 학과 개설('13~'14)

□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Pool) 제도(名人) 운영, 기술 지원 및 종합적 컨설팅 체계 구축

* 유기농업 기사(기능사) 등 전문 인력 확보, 지원 체계 구축 검토

제6장.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정책 목표

- ◆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농업과 환경의 조화(상생) 방안 모색

주요 과제

- ①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리
- ②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 ③ 농업환경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④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 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 사업 실시

정책 지표

- ◆ 농업환경자원정보 D/B 구축(점) : ('10) 3,300점 ⇒ ('15) 5,000
- ◆ 토양검정 분석수(점) : ('10) 48만점 ⇒ ('15) 75
- ◆ 토양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건수 : ('10) 210만건 ⇒ ('15) 350

1.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추진 방향 】

◇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는 D/B 구축

- 지역별 농업환경상태 진단 및 정책 연계 방안 마련

□ 국내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

- ◆ (개념)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요소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값
- ◆ (목표) 농업과 관련된 자연자원 및 환경 문제를 규명하고, 정책 및 사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 토양, 물, 대기 등의 환경요소와 외부적 농업 투입재에 따른 양분수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의 농업환경 변동조사 항목 및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 개발

* OECD 농업환경지표(13개), EU의 IRENA 프로젝트(35개 농업환경지표) 등

□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상태 진단 및 정책 연계 방안 마련

- 농업환경자원의 D/B 구축을 통해 정책의 연계성 분석에 관한 모형 개발 등 추진

* 네덜란드의 농업환경정보모델(STONE) : 농업·환경 정책의 영향을 평가

- 국가별 또는 지역별 농업환경상태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농업환경대책 마련, 정책과 연계 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분야의 정책 평가 지표로 설정, 관리
 - 우리부 자체평가업무지침 및 친환경농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전문가·정책담당자간의 지표개발 네트워크 구축

- ‘농업환경지표 포럼(가칭)’ 운영, 지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 연계 모델 개발 등 추진
 - *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합동작업반 회의(연 1~2회)

<농업환경지표 목록(안)>

지표 분류	목록	세부목록
토양(흙) 자원	토양화학성 (토양비옥도)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등
	물리성	토성, 유효토심, 배수정도 등
	미생물상	농경지 토양 미생물 분포상
	중금속 함량	취약 농경지 vs 전체 농경지
	농약 잔류량	
물 자원	농업용수 수질	기초수질(pH, DO 등), 유기물지표, 영양염류, 양이온, 중금속류
	수자원 보존량	
대기 자원	온실가스 배출량	농경지(작물별, 축종별)
양분	양분수지	질소/인산 수지 (질소/인산 잉여)
	가축사육두수	소/돼지/닭
	가축분뇨 발생량	질소/인산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분뇨처리시설 보유현황	
	화학비료 사용량	질소/인산
	작물 양분흡수량	질소/인산

2.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 추진 방향 】

◇ 농업환경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분산되어 있는 관리 기능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 흙·물·대기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흙 자원) 소유·이용 뿐만 아니라 토양의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수립, 지속적인 토양 개량 및 관리

○ 토양 실태조사 및 농업환경지표 등을 통해 토질의 등급 변화를 파악, 토양개량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일률적인 시·군 신청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토양개량제(석회질, 규산질 비료) 및 농자재 지원을 토양 진단에 의해 맞춤형 지급하는 방안 검토

○ '흙토람'의 토양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전체의 One-stop 서비스 체계로 확대 개편

- 토양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후정보 보완, 활용도 제고

- 토양정보시스템과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 중장기적으로 토양과 관련된 통합적인 흙자원(토지+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물 자원) 이수·치수 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물관리 방안 추진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D/B 구축

○ 「물자원 협의·조정 기구(가칭)」 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용수 수질 개선 및 사전 예방적 수질 관리 추진

□ (대기 자원) 온실가스 대응 농업부문의 종합관리 방안 추진

- 주기적인 농업부문(경종·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기존의 농림수산물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시스템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 따라 재정비
 -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DB 구축('11~'13년)
-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성적표시제 대비 연구 강화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정확한 배출량 산출을 통해 사업배출권 확보, 농가 인센티브 방안 검토

<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참여 가능 사업(안) >

- i) 맞춤형비료 및 녹비작물을 이용한 화학비료 저감사업,
- ii) 논 콩·옥수수 재배 등 쌀 생산조정제 사업,
- iii) 바이오에너지 작물 및 연료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
- iv)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탄소표시제 시행 기준 마련, 시범 인증 사업 실시
 - * 공산품, 교통, 환경품목 등에 대해 탄소실적표시제 시행 중('09~, 환경부).
다만, 국내 농식품에 대해서는 외국 농산물의 성적을 토대로 시범 인증 진행 중
-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 적응 농작물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 감축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농업생산 활동 중의 저감 기술 개발 추진
 - 온난화 적응 재배법 및 내병해충성 작물 품종 개발 등 추진

3. 농업환경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 방향 】

◇ 농업환경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

- 인력 육성, 맞춤형 기술의 개발, 법적 제도개선 등

□ 분야별/지역별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농업환경별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농업환경변동을 나타내는 관련지표의 D/B와 GIS를 활용한 농업환경오염도 작성 및 환경부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양분수지, 화학비료·농약의 환경위험 정도, 토양침식 정도 등 주요 농업환경지표 변화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환경오염도 작성, 체계적인 농업환경 자원 관리

-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 다른 지자체 전파 및 대국민 홍보

□ 농업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지자체 포함 정책담당자의 농업환경 분야 교육 기반 확대
 - 친환경농업 관련 과정에 필수항목 추가 또는 '농업환경 기초 과정' 신설 검토
- 친환경 바우처 교육 등 농업인의 교육 과정에 '농업환경의 이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가칭)' 추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민간 분야 전문가 양성 방안 검토
 - 토양조사 전문가 양성 및 특채 방안 추진

* 토양관리기사(기술사) 복원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방안 검토

□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맞춤형 최적관리방안(BMP) 개발 및 보급 검토
 - 지역단위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확대 (축분퇴비 및 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 구축)
 - 지역별·작물별·영농규모에 적합한 정밀농업과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유기경종·유기축산 단지 육성
- 농업용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 시기별·시설물별·재배방법별 적정 용수공급 방안 수립을 위한 용수공급량 산정시스템을 개발, 농업용수 공급의 효율성 제고

□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농업환경 변동조사' 사업을 '농업환경 자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으로 확대 개편
 - 농업환경지표 및 표준조사구의 관리 방안 신설 추가 검토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현행)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 (개정)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농업환경 관련 요소를 고려토록 조치
 - 농업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농업환경지표' 도입방안 검토
- 농업환경 관련 전략적 연구·지원을 수행할 "농업환경 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검토

4.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 추진 방향 】

- ◇ 농업환경 분야의 정책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관련 주체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홍보 실시

□ 관련 주체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정부간, 정부-지자체간, 정부-생산자간 농업환경 관련 파트너십 구축
 -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농업환경자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협력체계) 구성 검토
 - 지역단위 농업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검토
- 환경친화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 생산자, 소비자, 연구자, 관련기관 및 NGO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 시스템 구축

< 관련주체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구축(안) >

- i) 생산자 : 농업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그린경영체 수행
- ii) 소비자 : 환경친화적 농산물에 대한 가치 인정(탄소표시제 등)
- iii) 연구자 : 환경친화적 자원 관리를 통한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보급
- iv) 정부(지자체) :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v) 친환경농업단체(NGO 등) : 정책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수행

□ 농업환경 분야의 정책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93년 이후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합동작업반 회의(연1~2회)

- 각국의 농업환경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농업환경지표 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 공유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대응 및 연구 연맹 창립 추진 등

□ 농업환경자원 백서 발간

- 농업환경자원 실태에 대한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자원의 보존 및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 환경자원별 지표를 관리
 - 농업환경자원의 관리 및 이용정책을 소개하고, 자원별 관리 및 이용 성과를 홍보
 -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 자료 서비스 및 교육·홍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초기에는 정부가 전국 차원의 백서 발간하다가, 체계가 정착 되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도록 추진

< 「농업환경자원 백서」 주요내용(안) >

- i) 농업환경자원 관리 및 이용 현황 / 관련 정책 등
- ii) 농업환경자원 지표(지역단위 현황 및 평가 등)
- iii) 외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제도(사례 소개 등)

□ 농업환경 교육·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업환경 바로알기」 등 홍보 동영상 및 뉴미디어 콘텐츠 (UCC,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를 통한 홍보 강화
 - 안내책자, 브로셔, 학생용 보조교재 등 개발·보급
- 농업환경 관련 내용을 관련 업계 등 정보 수요자(PCRM)에게 제공
 - 농업환경 관련 주간 e-Newsletter 작성·배포 방안 검토

5.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 사업 실시

【 추진 방향 】

◇ 지역별 종합적 양분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

-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 관계를 기초로 양분 수지 파악

□ 양분수지 지표 산출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상태 진단

- 지역단위 양분수지 관리대상 물질을 질소와 인산 성분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
 - 먼저, 질소 성분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양분수지를 관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인산성분도 포함
- 해당 시·군의 양분수지(질소/인산) 관련 D/B 구축 및 정책 분석모델 정립
- 정책담당자(지자체) 및 정책대상자(농업인) 교육 실시

□ 지역별 양분수지(질소/인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양분수지 검정 모니터링팀(가칭)'의 평가 및 확인 절차 진행
- 지역별 관리대상 물질의 양분수지 과잉 정도에 따라 양분투입 과소지역과 과다지역으로 구분, 종합적 관리
 - 양분관리 감축정도에 따라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와 벌칙 검토
- 각 지역의 환경부하 상태 및 양분 관리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지역별 양분수지 모니터링 및 관련정보 공개
 - * 휴토람의 '토양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특정지역을 선정,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제7장. 친환경축산 · 임업 · 수산업 육성

정책 목표

- ◆ 축산 · 임업 · 수산업 등의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로
新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주요 과제

- ① 친환경 · 유기축산 확대
- ②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친환경임업 기반 조성
- ③ 친환경 녹색 수산식품산업 육성

정책 지표

- ◆ 친환경 축산물의 비중(%) : ('09) 7.3 ⇒ ('15) 13
- ◆ 활엽수 조림 면적(천ha) : ('10) 4.7 ⇒ ('15) 5.0
- ◆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개소) : ('09) 600 ⇒ ('15) 1,610
- ◆ 친환경인증 수산물의 품목 : ('09) 10개 ⇒ ('15) 20

1. 친환경 · 유기축산 확대

【 추진 방향 】

- ◇ 축산업 등록농가의 10% 수준까지 친환경직불제 참여 유도
- ◇ 경종과 축산의 연계 체제 강화, 안정적 기반 구축

가 친환경 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

-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직접지불제 확대
 -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 도모
 -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산지가격이 높아 사육두수 감축 기피 및 조사료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 미흡
 - * '09 : 58농가, 743백만원(유기 1농가 24백만원, 무항생제 57농가 719백만원)
 - '09년말 현재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90,223호 등록 완료
- '15년까지 축산업 등록농가의 10% 수준까지 참여 유도
 - '10~'12기간중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프로그램을 보완,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 관련 단체 ·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대상 확대
 - * 축종 확대 : 4종(한 · 육우, 젓소, 돼지, 계란, 육계) → 5종(오리 추가)

나 유기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 '15년까지 친환경 축산물의 비중을 전체 대비 13%까지 확대
 - 친환경 축산물의 비중 : ('09) 7.3% → ('13) 11 → ('15) 13
- 유기축산 인증여건 우수농가의 적극적인 발굴 등 기반 조성
 - 기존 축산기반을 갖춘 품질인증 축산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유도
- 친환경축산 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실시
 - 유기축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품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교육 실시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10: 6개소)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기반 구축

□ 유기축산물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 유도 및 순환적 유기농법에 기초한 유기축산 유도를 위해 유기농산물의 부산물과 유기축산농가 연계방안 강구
 -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연계하여 유기농산물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지역단위 유기농업 Network 구축
- 유기농업 부산물(벼짚, 미강, 유기채소·과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여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연계체제 강화
- 유기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기배합사료 유통활성화 추진
 - 유기사료 생산 및 가축 급여기준 적합 생산업체를 “유기배합사료 제조업체”로 지정하고 「유기사료」로 표시하여 시판하는 방안 추진
 - 원료의 유기농산물 인증여부, 원료보관 및 생산라인 구분 등 확인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친환경임업 기반 조성

【 추진 방향 】

- ◇ 활엽수 조림 확대 및 적극적 산림사업으로 수원 함양기능 증진
- ◇ 친환경임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품질 향상
- ◇ 폐목재 및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의 활용 확대

가 산림의 수원 함양 기능 증진

□ 활엽수 조림 확대 추진

- 수원함양과 산림생태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엽수림 조림 확대
 - 활엽수 조림 : ('11) 4.8천ha → ('13) 5.0 → ('15) 5.0
- 백합나무, 참나무류, 특용활엽수 등 인공조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조성, 소득경제조림, 경관조림 등
- 우량활엽수 조림용 종자확보를 위한 활엽수종 채종원의 조성 확대
 - 활엽수 채종원 : ('11) 135ha → ('13) 213 → ('15) 239

□ 적극적인 산림사업 실행으로 수원 함양기능의 증진 도모

- (조림)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 활엽수 위주 식재
- (숲가꾸기) 침엽수 조림지 강도간벌에 의한 하층식생 발달 촉진
- (사방) 황폐산지·계천 복구와 사방댐 시설 등으로 산원수(山原水) 보호

나 친환경임산물의 생산 지원

□ 친환경임산물의 생산지원 체계 강화

- 임산물생산·가공·유통지원 등 친환경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 산간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약성이 풍부한 전통 약용식물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육성
 - 산지약용식물 저장·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
 - 산촌 생태마을과 연계한 산약초 타운 조성
- 산양삼 등 청정임산물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체계 개선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시장 신뢰회복을 위하여 우선 '11년부터 산양삼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제도 도입
 - * 산양삼 재배시 생산신고, 생산과정확인제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체계적인 생산·유통체계 개선
 - 산양삼에 대한 품질특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삼주·하수오 등 타 품목으로 확대시행
 - * 삼주 : 국화과 식물로 어린 순을 나물로 해 먹거나 뿌리는 약용으로 활용
 - * 하수오 : 우리나라 각지 산야에서 야생하며, 약용이나 외용으로 활용

□ 산지 토양의 청정화 추진

-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산지토양 개량사업 추진
 - 중금속 등 오염피해 또는 연작으로 인한 산성화된 땅의 지력 회복을 위해 석회·목탄·목초액 및 유기질비료 등 정화제 공급

- 토양의 물리성·화학성 개량 및 토양산도(PH 5.0이하 지역) 교정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선정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농약대체 병해충 방제 등 친환경임업의 기술 개발 및 현지 보급**

- 성페르몬, 포충등 등 농약대체 장비 지원
-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의 개발(국립산림과학원) 및 활성화
 - 밤, 대추 등 유실수 주요해충에 대한 천적 중심의 방제기술 개발 및 보급

□ **친환경임산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생산자·연구자·담당자 상호간의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정책평가, 기술교육·보급, 정보제공, 홍보 등 친환경생산자·단체 중심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임산물의 주요 품목별 담당자 및 연구자를 지정 운영

□ **임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 임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운영지원
- 우수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마련
- 「임산물 리콜제」의 확대 실시 등 청정 임산물의 신뢰성 확보
 - 전국 산림조합 직매장 및 정부보조 직매장 등의 확대 추진
 - 친환경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 원산지 표시 및 불량임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협조체제 구축, 주기적인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생산이력제 추진

다 목재 자원의 재활용 촉진

□ 폐목재 재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폐목재 재활용산업이 발전한 선진국 수준으로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을 구축

- 폐목질 재생보드의 제조기술 및 성능 개선
- 폐목재 재활용상의 문제점 분석 등 목질폐기물의 순환이용시스템 개선

□ 폐목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속적 지원

- 폐목재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
 -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설·교체·증설 등 지원
- 폐목재 재활용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등에 폐목재 구입을 위한 융자금 지원

□ 국산재 이용 확대 및 친환경적 별채 지원

- 친환경 별채제도 시행으로 별채사업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 목재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임목 부산물 활용 방안 강구
- 숲가꾸기 산물 수집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재의 이용도 제고
 - 수집 물량을 확대하고 산업용재, 바이오에너지용 등으로 활용
 - 숲가꾸기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병해충 피해목을 파쇄 칩·톱밥으로 가공하여 적극 활용

4. 친환경 녹색 수산업 육성

【 추진 방향 】

- ◇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성 확보 위한 친환경양식 기반 구축
- ◇ 어장 환경 및 자원 회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실현

□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가능 어업 실현

- 노후어선 감척시 적정규모의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신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 자연분해성어구 사용 정착을 위해서 대상 어종별 다양한 어구 개발 및 보급 확대
 - * 어구 사용척수 확대 : ('10) 300척 → ('15) 500척
 - 자연분해성 2중 이상 자망 어획성능 검증 강화

□ 어장환경 개선 및 관리체계 개선

- 어장 오염도 및 수용력 산정을 위한 전국적 어장환경 실태조사
 - 연안 양식어장 수역에 대하여 수질 및 퇴적물 환경 조사, 양식생물 생태·생리 조사, 어장수용력 산정 등 실시
 - * ('08~'11) 남해 → ('12년 이후) 동해, 서해
- 어장환경 상시측정 관리제도 및 어장환경 평가제 도입 등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11~12년)

- 전국적인 어장환경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측정망·정보망 등 어장환경 상시측정 관리제도 도입
- 어장 관할 지자체장의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제 도입
- 어장 및 연근해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장정화사업('86~'10년, 총 496천ha),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09~'10년, 2만톤), 고밀도부표 보급('09~'10년, 260만개), 굴패각 친환경처리('09~'10년, 24만톤) 등 지원

□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확대**

- 친환경·실용 배합사료 및 급이 프로그램 연구개발 확대
- 배합사료 품질검정 확대 실시
 - ('09) 150점 → ('10) 200 → ('13) 300 → ('15) 400
- 배합사료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
 - '04년부터 추진 중인 배합사료 보조금의 지원 강화
 - '08년부터 추진 중인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특별융자 지속 추진

□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

- 생산단계의 안전성검사 강화 추진
 -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11 : 9,000건)
 - 신종 유해물질 검색 및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한 탐색조사 확대
 -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한 유해물질 중점검사제 도입 및 위반업체 6개월간 특별관리

- 지자체에 분석검사 장비 지원 등 수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수산물이력제 대상품목 확대 및 중점 육성품목(4개종) 육성
 - 참여품목 : ('09) 12 품목 → ('12) 18 → ('15) 25
 - 참여업체 : ('09) 600개소 → ('12) 1,350 → ('15) 1,610
- 친환경인증 수산물의 품목 확대
 - ('09) 10 품목(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툇,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15) 20

□ 자원조성 사업 확대 및 통합적 추진 시스템 구축

- 바다목장 사업, 인공어초 시설,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화
- 인공어초 4.4천ha 시설 및 건강한 수산종묘(치어 등) 1억마리 방류
 - 지역 토착성 고급어종 및 생태계 조화를 감안한 어종 방류 확대
 - * 붉은 썸팽이(여수), 강도다리·쥐노래미(울진), 쥐노래미(태안), 다금바리(제주)
- 대규모 바다숲 조성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산업화 기반 확충
 - 갯녹음 등 연안생태계 회복을 통해 어류 산란·서식장 조성 및 CO₂ 저감
 - 외해에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 조성(50만ha/'20년), 그린에너지 및 고부가 의약·화장품 생산
- 해역별·지역별 바다목장 특화사업 확대
 - 어로형(여수), 갯벌형(태안), 관광형(울진), 체험관광형(제주) 등 맞춤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 추진 및 확대

제 4 편

투자 소요 및 추진 평가 계획

제1장 투융자 계획

제2장 분야별 투융자 계획

제3장 계획 추진 및 평가체계

제1장. 투융자 계획

가 투융자 규모

-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기간('11~'15)중의 총 국고 투융자 규모는 4조 4,607억원으로 연평균 8.4% 증가
 - 기관별 투융자 규모를 보면 농식품부 3조 6,042억원(80.8%), 농촌진흥청 1,544억원(3.5%), 산림청 7,021억원(15.7%)
 - 계획기간 중의 연평균 투융자 규모는 8,921억원('10 투융자 대비 10.3% 증가)이며, 연평균 증가 예산액은 549억원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투융자액(억원)	8,091	7,239	8,241	9,483	9,661	9,983	44,607
비 율(%)	-	16.2	18.5	21.3	21.6	22.4	100

- 5년간의 총 국고 투융자 규모에서 보조가 80.6%(3조 5,941억원), 융자가 19.4%(8,667억원)
 - 보조 3조 5,941억원중 농업부분 2조 4,464억원, 축산부분 3,138억원, 임업부분 5,827억원, 수산부분 2,512억원

나 투융자 재원

- 농식품부 국비 3조 6,042억원은 예산(일반, 농특, 광특 등) 및 기금(농안, 축발, 수발 등)으로 충당하며, 농진청과 산림청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
 - 투융자계획은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재정운용 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제2장. 분야별 투융자 계획

가 분야별 비중 및 편성 방향

-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2조 6,178억원(5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2,617,838백만원(58.7%)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460,688백만원(10.3%)
 -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166,977백만원(3.8%)
 -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 72,500백만원(1.6%)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110,700백만원(2.5%)
 -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31,740백만원(0.7%)
 -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 1,000,291백만원(22.4%)
-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외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 확대
 - 가공·농자재 분야 신규 투입 및 소비자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유통·소비·안전 분야 투자 확대
 - 농업환경 종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등

분 야	총 국고 투융자 규모(억원, %)				비고
	제2차(A)	제3차(B)	증감액(B-A)	증감율(B/A)	
생 산	14,678	26,178	11,500	78.3	
유통·소비	1,965	4,607	2,642	134.5	
안전·품질	802	1,670	868	108.2	
가공·농자재	-	725	725	순증	
기술개발	634	1,107	473	74.6	
농업환경	206	317	111	53.9	
기 타	9,636	10,003	367	3.8	
계	27,921	44,607	16,686	59.8	

나 주요 과제의 연차별 투융자 계획

주요 과제명	연차별 소요 예산(억원)						비중 (%)
	합계	'11	'12	'13	'14	'15	
합계	44,607	7,239	8,241	9,483	9,661	9,983	100
1.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26,178	4,258	4,750	5,789	5,686	5,696	58.7
○ 친환경농업(유기농) 전문단지 확대	2,536	365	281	510	690	690	
○ 토양지력 증진(흙 살리기 추진)	16,718	2,495	3,123	3,933	3,579	3,589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확대	5,112	1,049	1,013	1,013	1,018	1,018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보전	1,812	349	332	333	399	399	
2.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4,607	561	747	896	1,100	1,303	10.3
○ 산지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	3,378	424	555	600	800	1,000	
○ 다양한 유통 주체의 육성	1,153	127	178	282	283	284	
○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교류 강화	60	9	12	12	14	14	
○ 해외 마케팅 구축 지원	15	2	2	3	3	5	
3.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670	292	329	339	346	363	3.8
○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213	31	44	46	44	47	
○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1,457	260	285	293	302	316	
4.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725	42	118	147	172	246	1.6
○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415	37	82	84	84	128	
○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	270	1	28	55	80	106	
○ 친환경 녹색기술 및 업체 민간투자 활성화	40	4	8	8	8	12	
5.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1,107	137	240	241	244	245	2.5
○ 친환경(유기)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1,060	132	232	232	232	232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47	5	8	9	12	13	
6.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317	57	61	63	68	69	0.7
○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관리	70	13	14	14	15	15	
○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214	40	42	42	45	45	
○ 농업환경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	2	3	3	4	4	
○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7	1	1	2	2	2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11	1	2	2	3	3	
7. 친환경 축산업·임업·수산업 육성	10,003	1,892	1,997	2,008	2,045	2,061	22.4
○ 친환경 유기 축산 확대	470	30	80	1,00	120	140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친환경임업 기반 조성	7,011	1,403	1,425	1,403	1,405	1,385	
○ 친환경 녹색 수산업 육성	2,512	458	492	505	520	537	

주) 1. 상기 소요예산은 국고 보조와 국고 융자의 합계 수치임.

2. '12년부터 소요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장. 계획 추진 및 평가 체계

가. 계획의 추진 체계

- 과제 담당기관은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 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
- 지방자치단체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자치단체 실천계획 수립 시행
 - 농식품부 기본계획 → 시·도 실천계획 → 시·군 실천계획
 - 시·도에서는 자체 실천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제출
 - 시·군에서는 자체 실천계획 수립 후 시·도 제출 및 이행 철저

나. 계획의 평가 체계

-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농식품부에서 매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과제 담당기관에 송부, 담당기관에서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제출
 - 과제별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 보완
- 시·도는 매년 시·도, 시·군 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평가